

기획2번 모선희 이인희

총 150 + 30부= 180부인쇄

기획 2번 30부만 **김필자** 따로 해주세요

2009년 2월 28일

발 간 사

최근에 국내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한국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8년 4월 현재 110만 명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11만 명이 결혼이민자들로 2015년에 26만 6천명, 2020년 35만 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한국사회에 일방적인 동화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사회적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이 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다문화 가족의 급증 추세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시·도,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수행한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모선희 교수, 이선행 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책임연구원, 김성운 연구원 그리고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문하여 주신 목원대학교 장운정 교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09년 월 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연구요약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에 국내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한국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한국사회에 일방적인 동화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사회적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대, 다양한 민간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 기관 등 최근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 중앙의 여러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분석하고, 다문화가정의 주요 서비스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II.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

다문화(multi-culture, inter-culture, cross-culture)는 일반적으로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 따라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비빔밥 문화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가족과 다문화가족과의 융합을 마치 비빔밥이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특유한 맛을 만들어가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샐러드 보울보다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 및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언어와 문화적 적응 문제, 둘째 경제생활 및 어려움의 문제, 셋째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 넷째 친척, 이웃과의 관계 및 사회적 편견문제 등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주체기관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공포·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8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정부 개각 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이민자여성 지원 사업을 주도하여 왔던 여성부에서는, 3차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2012년)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방안(2009-2012년)을 수립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①다문화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 ②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지원, ③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④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의 4대 정책과제를 700억 원 예산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문화정책팀을 신설('07. 11.)하고 다문화 문화향수실태조사 실시, 다문화체험 지원,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농촌사회여성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 다문화사회 관리과정을 신설하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사례·실무 위주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들의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한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양육 상담, 사회·문화적응 사업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다문화 유관기관·부서 T/F 팀 구성은 타 시·도와는 차별되는 정책으로 통합적 지원 사업을 위한 조치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과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3) 민간단체

민간단체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도에 21개소, 2007년 36개소이던 것이 2008년 80개소로 확대되었고,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09년 100개소, 2010년 14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공통사업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생활상담사업,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생활교육, 정보화교육, 취업교육, 자조집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III. 결론

1) 다문화에 대한 시각의 전환: 통합에서 상호공존으로

첫째, 다문화 관련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문화 관련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한의 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동화 및 통합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교육적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류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촉구와 인력활용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이 작게는 마을 반사회 참여, 학부모 모임 등으로, 크게는 거주 외국인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 자신의 주체적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체계적, 통합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첫째, 현재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부처별 역할 분담,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국가 차원의 정책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민간, 민간-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 파악된 다문화가족의 기초 현황 등의 자료를 개인적 사생활이 보장되는 한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차별화된,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첫째, 다문화가족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방식 적응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이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수용·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의 각 시기별 필요한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특화하는 정책으로 전 시기에 걸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 및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즉,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적응 외에도 인권, 사회적 지위, 결혼이민자 2세를 위한 지원 등이 주목받고 있고, 또한 다문화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다문화 지원정책도 현재의 결혼이민자가족 중심에서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기관들의 인력,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교육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의사, 간호사 및 의료직 전문가, 조리사, 이·미용사 등의 다양한 전문 인력은 훌륭한 인적 자원들로써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V. 정책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들을 조율하고 재조정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색과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정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 내용과 개선방안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 례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 2 장 다문화가정의 현황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5
2.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문제점	13
3. 다문화가정의 욕구	21
4. 소결	26

제 3 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28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44
3. 민간단체의 지원정책	53
4. 외국의 다문화 정책	66
5. 소결	74

제 4 장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및 정책방안 조사결과

1. 조사개요	78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우편조사 결과	79
3. 전문가회의 결과	85
4. 소결	90

제 5 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1. 다문화에 대한 시각의 전환: 통합에서 상호공존으로 91
2. 체계적, 통합적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추진 93
3. 차별화된,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수립 94

제 6 장 결론 97

참고문헌 99

- <부록 1>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 102
- <부록 2> 우수사례 110
- <부록 3> 다문화가족지원법 122
- <부록 4>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6
- <부록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08년) 132

표 차 례

<표 1> 행위주체별 다문화주의 유형	7
<표 2>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9
<표 3>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10
<표 4> 지역별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11
<표 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17
<표 6>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19
<표 7> 다문화 아동청소년 재학생 현황	19
<표 8> 가족 생애주기별 7대 과제	30
<표 9> 사회통합과 평등문화정착 과제별 해당부처	34
<표 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5
<표 11>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6
<표 12>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7
<표 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8
<표 14>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9
<표 15>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50
<표 16> 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실적	54
<표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특성	61
<표 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62
<표 19> 한국여성재단 이주여성 지원사업	65
<표 20> 일본 다문화공생플랜의 주요내용	70
<표 21> 조사대상기관 특성	79
<표 22> 조사대상기관의 주요 현황	79
<표 23> 결혼이민자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정도	82
<표 24> 필요한 지역사회연계사업	83
<표 25> 연계활동에서의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방법	83
<표 26> 결혼이민자가족사업 평가(충분정도)	84
<표 2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의 자체역량강화	84
<표 28> 결혼이민자가족의 정책적 지원사항	85

그림차례

<그림 1>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29
<그림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34
<그림 3>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37
<그림 4>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유형	67
<그림 5> 결혼이민자가족사업 실시현황	81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4월 현재 110만 명에 이르러 우리 사회는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중 11만 명이 결혼이민자이며 2015년에 26만 6천명, 2020년 35만 4천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설동훈, 2008). 따라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한국사회의 일방적인 동화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사회적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2007년 현재 총 국제결혼 건수는 38,491건으로 전체 결혼의 11.1%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가족은 국제결혼 중 76.1%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이후 가속화되어 2000년 이후 일반적인 결혼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 자녀양육 및 부부갈등, 경제적 빈곤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거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될 경우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농촌의 출산율을 증가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거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급증 추세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신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가족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8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의 가족정책관실 아래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어 다양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이 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운영 중인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국, 도 단위 중심의 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실태 및 정책에 관한 연구가 정부관련 기관과 학계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중앙부처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에서 각 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실태 분석과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결혼가족의 현황과 이들의 부부갈등 및 적응(김이선 외, 2006; 김오남, 2006; 양순미·정현숙, 2006; 장온정, 2007; 한건수, 2006), 자녀 교육(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영주, 2007; 조영달, 2006) 등 다양한 생활실태 및 욕구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법적 지원방안(이성언·최유, 2006) 등이 다문화가족의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대, 다양한 민간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 기관 등 최근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 중앙의 여러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최근 다문화가족의 통계현황, 관련 법, 담당부서 및 정부정책,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서비스 현황 등의 종합적, 체계적 분석
-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관련 기관 연구와 학계 연구의 문헌연구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 ③ 다문화가족의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기존의 다문화가족 연구들은 전국, 도 단위에서의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과 특정 이슈에 대

한 학계 연구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현실이다. 올해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다문화가족과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부서로 신설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최근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존실태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분석하고, 타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주요 서비스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우수 서비스제공 사례,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는 다문화 개념, 다문화가정의 유형 및 변화, 다문화가족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현황에서는 국제결혼의 성립과정,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에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의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정책과 외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다양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넷째, 다문화가정 지원기관의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우수 사례, 전문가 회의 결과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범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가정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새터민) 등을 모두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다문화가정의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①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 등의 자료수집 및 ②기타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둘째, 우편설문조사를 다문화가족의 주요 서비스 제공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80개소)

와 건강가정지원센터(64개소)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 애로 점, 지원욕구,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현황,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우수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2장 다문화가정의 현황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1)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는 multi-cultural, inter-cultural, cross-cultural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아직은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란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 따라 각 사회 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초래된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이들에 대한 다수집단의 인종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소수민족집단의 사회부적응, 다수-소수민족집단 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4월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족의 실태파악 및 인권, 사회적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자국문화 혹은 소수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타 문화들 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가 등이다(강신임, 1998).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으로는 크게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동화주의(assimilationism)의 관점이 있으며 이 두 관점은 서로 대립적이다.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다문화주의 관점은 샐러드 보울론(salad bowl theory)으로 표현되는데 다양한 이주문화가 서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릇의 역할을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샐러드 보울에 담긴 다양한 재료는 각각 고유의 맛과 모양을 유지하면

서도 섞으면 맛있는 샐러드가 되는 것처럼 여러 인종 및 민족이 각자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대로 동화주의 관점은 접촉-경쟁-화해-동화의 과정을 통해 이민자들을 주류사회로 동화시키는 입장으로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을 억압하고 자국의 언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등을 실시한다. 동화주의관점은 용광로 이론(melting pot theory)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기존의 다수집단이 주류이며 이민자들의 소수집단이 주류 사회에 녹아서 합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비빔밥 문화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가족과 다문화가족과의 융합을 마치 비빔밥이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특유한 맛을 만들어가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샐러드 보울보다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주문화가 형성되어 왔던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슈화되었으나 최근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도 다문화사회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복수의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서 국가통합을 이루고자하는 이념 또는 정책을 지칭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외국인에 대한 하나의 관리 기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사회집단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또는 ‘풀뿌리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원주민, 이주민, 소수민족집단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처지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주장한다(한국사회학회, 2007).

2) 다문화가족의 유형 및 변화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한편,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었으나, 1980년 후반부터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라는 의미로써 ‘다문화

가족'은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 가족 등을 지칭하여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족 개념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두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표 1〉 행위주체별 다문화주의 유형

구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목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적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관리 - 체류외국인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강화로 사회갈등 및 비용 최소화 - 외국인과의 국민간 상호문화를 이해·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다문화공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과 이주자들이 주민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감
행위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시민 단체 및 종교단체
정책목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외국인자녀,난민, 외국인 인권존중고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 외국인 및 불법 체류 외국인
주요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 - 우수 외국인력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인권 보장 -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 증진 - 결혼이민자가족의 역량강화
주요 다문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다문화축제, - 권익증진, 인권보호, - 역량강화 프로그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외국인의 1/4인 불법체류 외국인 배제 -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인구 정책으로 소수 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 정부기관 간 중복투자와 단기적 지원 -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인력, 시설 부족으로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활동 어려움 -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수행 어려움 -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진보적인 주장(불법체류자의 전면적 합법화)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자료: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에 따르면,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뜻한다: 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문화가족법의 정의에 의하면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다음의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처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근로자¹⁾ 가족, 셋째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북한이탈주민²⁾(새터민)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첫째 분류에 해당하는 국제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은 1950-70년대까지는 주로 해방이후 미국의 한국 주둔으로 발생한 한국인과 미군, 특히 미군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³⁾이 국제결혼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 남성 전문직 종사자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많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 또한 1980년 말부터는 수는 적지만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결혼이 등장하고, 1990년대부터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 1980년대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가 시행하는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동남 아시아권 국가에서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체류외국인은 증가하여 2008년 3월 31일 기준으로 1,118,495명에 이르고 이 중 미등록 체류자는 20.7%이다(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자료).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등의 순이며 중국은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방문취업제 및 결혼이민자가 많고, 미국은 재미동포 및 주한 미군이 많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의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행정안전부 2008년 7월 외국인주민실태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891,341명의 전체 외국인 주민을 대상 중 경기도 31.2%(277,991명), 서울 29.2%, 경남 5.7%, 인천 5.5%순으로 기업체 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이 지역거주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년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약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 2006년에 2,000명을 초과하였다. 2007년 12월 집계된 북한이탈주민은 남자 4,503명, 여자 7,751명으로 총 12,254명이었다.

3)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1세대와 2세대는 인종적 차별과 불평등 또는 새로운 기회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1982년 8월에 개정된 미국의 이민특례법에 의해 대부분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2003년에 인권위 조사결과 400—500여명 정도가 국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필벽재단은 아직도 5,000여 명이 남아 있고, 이외에도 30,000명 정도의 아시아계 혼혈인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국제결혼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2>, 실제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0년에는 그 비율이 전체 결혼건수 중에서 3.7%를 차지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10%를 넘어 2005년에 13.6%에까지 이르고 그 이후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제결혼 중에서도 ‘한국남성+외국여성’의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2000년에는 국제결혼 중 59.3%가 ‘한국남성+외국여성’이었으나 2006년에는 그 비율이 76%로 현재 사실상 국제결혼의 대다수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한 경우, 그 가족들은 대부분 한국에 체류하지만,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이 결혼한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표 2>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5	398,494	13,494 (3.4)	10,365 (2.6)	3,129 (0.8)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11.1)	29,140 (8.4)	9,351 (2.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8. 10.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중 여성결혼이민자는 88.8%이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11.2%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6).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여성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표 3>,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와 저개발국 출신들이 많은데, 2007년 현재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4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22.7%, 캄보디아 6.2%, 일본 5.7%, 필리핀 5.3%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출신의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것이 점차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라면 결혼정보회사나 사적인 경로를 통한 한국계 중국인과의 결혼과 특정종교를 통한 필리핀, 태국인,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000년 초반에는 동남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배우자 가운데 캄보디아는 2003년도 최초로 19명의 결혼 이민자가 발생한 후, 무려 3년 사이에 394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3〉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단위: %)

국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0	-3.5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 트 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1.3	357.9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5.7	12.2
필 리 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5.3	32.3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745	2.6	25.4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273	531	1.8	94.5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377	6.2	12.9
기 타	779	936	1,046	1,263	1,250	1,135	1,192	1,350	4.6	9.5

자료: 통계청, 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또한 200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던 중국 여성들과의 결혼이 2005년을 정점으로 2006년부터는 감소추세인 반면,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2005년과 2006년1년 사이에 74%가 증가)하였다. 그 외에 몽골, 캄보디아 등도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 결혼이주 여성들의 국적별 분포와 규모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한국인 남성들의 증가하는 국제결혼 수요로 2001년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정보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 대상지역으로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표 4>, 2006년 말 현재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중 약 1/4인 26.6%가 서울에, 25.8%가 경기도에 거주하여 인천거주자 6.1%까지 합치면 전체의 58.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결혼이민자중 수도권 거주자 비

을 78.4%와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있다. 절대적인 수치의 면에서는 도시거주자가 월등히 많지만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을 감안한다면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4〉 지역별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지 역	계	구성비	남 성	구성비	여 성	구성비
계	93,786	100	10,958 (11.7%)	100	82,828 (88.3%)	100
강 원 도	2,408	2.6	133	1.2	2,275	2.7
경 기 도	24,143	25.8	3,296	30.1	20,847	25.2
경 상 남 도	4,822	5.1	248	2.3	4,574	5.5
경 상 북 도	4,349	4.6	188	1.7	4,161	5.0
전 라 남 도	3,785	4.0	72	0.7	3,713	4.5
전 라 북 도	3,667	3.9	139	1.3	3,528	4.3
충 청 남 도	4,084	4.4	211	1.9	3,873	4.7
충 청 북 도	2,891	3.1	189	1.7	2,702	3.3
광주광역시	1,643	1.8	112	1.0	1,531	1.8
대구광역시	2,641	2.8	253	2.3	2,388	2.9
대전광역시	2,108	2.2	209	1.9	1,899	2.3
부산광역시	4,320	4.6	432	3.9	3,888	4.7
서울특별시	24,992	26.6	4,574	41.8	20,418	24.7
울산광역시	1,464	1.6	102	0.9	1,362	1.6
인천광역시	5,721	6.1	727	6.6	4,994	6.0
제주특별자치도	748	0.8	73	0.7	675	0.8

자료: 법무부, 2007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외국여자와 혼인 한 한국 남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은 2004년 7.1%에서 2006년 11.7%로 ‘전남’을 비롯하여 광역시도 지역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국제결혼 증가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전체 농림어업종사 남성 중 국제결혼 한 남성 비중의 증가로 이어져, 2004년 27.4%에서 2006년 41.0%까지 늘어났고, 2007년에는 40.0%를 나타내고 있다(동부 30.3%, 읍·면부 44.5%). 이런 수치는 같은 기간 중 국제결혼 전체비중이 주춤하는 시기를 감안한다면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 지역의 혼인 경향을 요약하면, 국제결혼 커플 중 2.3쌍이상은 남편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기, 제주,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체 농림어업종사남자 중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가 41%이상 최고 52.6%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증가는 주로 비수도권의 광역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배우자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을 둘러싼 특징적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양애경·이선주·최훈석, 2007).

3) 선행연구 검토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국, 도 단위의 정부관련 기관에 의한 연구와 학계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과제로 진행되었던 연구들은 주로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여러 측면의 생활실태 및 욕구,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설동훈 외(2005)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에서는 945가구의 국제결혼가족(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여성 결혼이민자 27명 대상의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실태, 사회복지,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지원 방안으로 1)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장, 2)가족해체 예방과 다양한 문화, 가치관의 공존 지원, 3)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4)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2006년에는 (설동훈 외, 2006) 후속 연구로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아동의 생활실태와 사회문화적 욕구 파악과 도농간 차이 분석을 추가하면서 아동의 사회적응 지원, 민관협력의 사회통합모델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이선 외(2008)의 「농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농림수산물 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분석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농업인적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결혼이민자가족 연구로는 경기도(정기선 외, 2007), 충청남도(김영주, 2006), 전라북도(박재규 외, 2005), 경상북도(정일선, 2006)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실태 분석과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 및 적응(김이선 외, 2006; 김오남, 2006; 양순미·정현숙,

2006; 장은정, 2007; 한건수, 2006), 자녀교육(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영주, 2007; 조영달, 2006), 법적 지원방안(이성언·최유, 2006) 등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성언·최유(2006)의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본법, 인종차별방지법의 제정 뿐 아니라 사회보장법 내에서 외국인의 주체성 인정과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영달(2006)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현장교사, 자원봉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현행 대상별 지원 대책의 정리와 보완, 전문가에 의한 교육지원 종합대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문제점

최근 국제결혼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결혼 유형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의 국제결혼은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직후에 다른 민족과 접촉할 수 있었던 소수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다. 일제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으로 강제 징용되어 간 한국인과 일본여성과의 사이에서 강제적·정략적인 결혼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결혼성립이 곧 민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로 여겨졌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두 국가 간의 국제결혼은 우리 민족의 열등감을 자극하였고 결국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전수현, 2002).

6.25전쟁 이후 주로 한국여성과 미군 남성들과의 결혼형태로 빈곤했던 상황 속에서 경제적 안정과 계층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⁴⁾. 이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을 하였던 한국여성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편견을 가졌는데 그 원인은 폐쇄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지촌 문화의 산물로 보기도 한다(전수현, 2002).

이와 같이 과거의 국제결혼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별

4) 미군에게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을 이른바 ‘양공주’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그녀들을 ‘신데렐라’로 상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공주가 된다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미군과의 결혼이 상징화되었다(유철인, 1993). 전수현(2006)제인용

한 결혼형태의 하나로 여겨졌다. 즉,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여건 속에서 ‘국제결혼’은 단일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리고 쉽게 용납 될 수 없는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으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거부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의 반대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제결혼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 통일교가 결혼을 주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통일교는 ‘이상적인 참 가정’을 만들고 세계평화를 가져온다는 종교적 이유를 내걸며 한국의 농촌총각과 일본여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였다.⁵⁾ 그 후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재개되면서 조선족 여성들은 친척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보다 합법적인 이주를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⁶⁾.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촌의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나중에는 도시 간 협정체결을 통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이 본격화되었다⁷⁾.

기관과 단체와 관련되어 집단적으로 성사되고 있는 최근의 국제결혼은 계층적인 의미의 새로운 편견과 차별의 이중성이라는 인식을 낳았다. 모든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종전의 인식과는 달리 국제결혼을 하는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보는 시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선진국 출신 사람과의 결혼은 주변의 부러움과 함께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만, 제3세계나 후진국 출신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냉소적이다(전수현, 2002)⁸⁾.

이러한 시각의 배경에는 ‘마지즌(margizen)⁹⁾’과 ‘데니즌(denizen)¹⁰⁾’으로 구분되는 차별화

5) 199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총 2057명중 일본여성은 1223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통일교가 주도한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에서 가진 통일교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1988년 통일교 신자인 일본인 여성과 공개적으로 6,500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6) 초기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배우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설동훈 외, 2005).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조선족이 85.3%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결혼은 국제결혼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사실상 ‘동족간의 결합’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들의 결혼에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7) 농촌총각과 연변처녀와의 결혼을 처음 주선한 정치인은 만주지역의 단절된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핏줄을 재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민족내혼이지만 국적으로는 국제결혼인 조선족 동포여성과의 혼인을 1990년 12월에 성사시켰다. 조선일보, 1990년 12월 16일(한건수, 2006, 재인용).

8)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이 이중적인 것을 의미한다. 서구문명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와 함께 다소 열등의식이 깔린 불신을 보이는 반면, 제3세계인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행태는 그 바탕에 자민족 중심주의와 인종주의 같은 문화 심리적인 경향이 깔려 있고, 후진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우월의식을 과시하는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수현(2002)

9) marginal + citizen :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본국을 떠난 이들은 진출국에서 ‘주변적 존재’로 살아간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불법이주노동자이거나 어떤 방식의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는 임시적 이주 노동자이다.

된 시각에 기인한다.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주민들은 전지구화의 흐름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니즌’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같은 주변화 된 범주인 ‘마지즌’으로 구분되어 한국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다. 한국 사회 역시 이들의 문화에 차별적 반응으로 ‘데니즌’들의 문화에는 우호적이며 교류를 원하지만, 이주노동자나 아시아권 결혼이민자들인 ‘마지즌’의 문화에는 별 관심을 쏟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현미, 2005)¹⁰⁾.

국제결혼에 대한 시각은 민족주의라는 이름하에 응집되고 단결되어 온 한국사회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입장이 바뀌었을 뿐 같은 맥락의 편견과 차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언어와 문화적 적응 문제

다문화 가족들은 결혼초기부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짧은 기간에 성립되는 결혼과정으로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다문화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공통된 언어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조선족이나 영어사용이 가능한 필리핀 국적의 아내보다 우리사회에서 낯선 언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태국 국적의 아내들과의 의사소통 곤란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그 하나의 예이다. 언어습득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기본적 조건이다.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을 당시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들을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류가 불가능하였고 고립감을 느꼈다고 한다(박주희, 2007).

더구나 다문화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대부분 한국어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를 바랄뿐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

10) denizen : 글로벌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러 이동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업이 보장해주는 안전망과 사회적 존중감을 즐기는 특권화된 이주민이다.

11) 김현미(2005), 한건수(2006)재인용.

다(여성가족부, 2006)¹²⁾. 여러 연구에서도 실제 남편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삶에서 배려하지 않아 부부간 갈등을 느끼며, 특히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상임, 2004; 김정옥·전형미·이현혜, 1990; 김득성·김정옥·송정아, 2000).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다문화 가족의 부부들은 결혼 이전에 겪었던 자국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상호간에 접촉함으로써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및 차이로 인한 충격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의 경우, 중개업소나 종교단체가 개입되면서 결혼과정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결혼과정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다 온 배우자를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본인과 문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기 어렵고 특히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박주희·정진경, 2007).

국내의 연구에서도 기후, 음식, 관혼상제, 의사소통의 규칙 등 풍습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이 다문화 가족의 생활전반에 나타난다고 하였다(양선화, 2004). 즉, 음식문화의 차이,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자녀양육과 교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 일상생활영역 뿐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태도, 더 나아가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영역까지 여러 면에서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가부장제적인 관습과 문화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매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며느리의 업무과중, 남성위주의 문화,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은 사회주의 국가나 모권이 강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일상생활방식에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사고방식의 차이는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남편과 시댁가족들은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외국인 아내와 며느리가 순응하고 따라야 함을 당연시할 뿐 아니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이고 습득하기를 강요한다(한건수, 2005). 그 뿐 아니라 한국인 여성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알아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외국인 아내와 며느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즉, 말을 안 해도 아내가 내 마음을

12) 국제결혼 부부들의 96.3%가 한국말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남편들은 부인나라의 말을 전혀 구사하려 하지 않는다. 부인이 평가한 남편들의 부인나라 언어 실력은 극히 부진하다. 부인들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으로 평가한다면, 남편의 부인나라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윤형숙, 2004).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고맥락 문화’에 익숙한 남편은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할 능력도 태도도 되어 있지 않다(윤형숙, 2004).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들은 외국인 아내와 며느리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며느리들의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은 텔레비전에 간혹 소개되는 해외여행이나 문물소개에서 보고 들은 단편적인 지식들 뿐, 실제 그들의 삶의 양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남편들과 시가족들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하여 상이한 문화에 따른 서로 다름을 개인의 성격과 성향으로 간주하는 오해와 갈등으로 증폭되어 부부 상호간의 결혼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부간의 부적응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상습적인 아내 구타와 폭언, 인격모독 등의 문제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의 이혼현황을 살펴보면 <표 5>, 2007년 총 이혼 중 국제결혼의 이혼건수는 8,828건으로 총 이혼의 7.1%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기간이 4년 이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79.9%로 부부간의 초기적응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혼(A)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과의 총 이혼(B=C+D)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B/A)	1.3	1.3	2.4	3.3	5.0	7.1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C)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총 이혼 대비 구성비(C/A)	0.3	0.3	1.2	1.9	3.2	4.7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D)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총 이혼 대비 구성비(D/A)	1.0	0.9	1.3	1.4	1.8	2.4
증 감 률	-	7.9	13.2	2.5	23.8	33.7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7.

2) 경제생활 및 어려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100-199만원인 경우가 50%이며, 월 평균 소득은 17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한국사회 전체가구 소득의 59% 또는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06). 또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절대 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설동훈, 2006).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육체노동직과 자영업이 가장 많으며, 남편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외국인 아내들이 한 톨이라도 벌기 위해 취업을 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아내들은 대부분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결혼이민자의 절반 가까이는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한 적이 있으며, 그들은 일 년에 평균 3회 정도에 걸쳐 약 150만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남편이 모든 살림과 경제권을 가지고 아내에게는 소액의 용돈이나 필요한 돈만을 지불하는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었고¹³⁾ 이로 인하여 경제권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11점 만점에 3.8점으로 스스로 '하층'에 가깝게 느끼고 있었지만, 외국인 아내들은 '본국의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는 중간정도는 살고 있으나, '보통 한국인 가족'과 비교할 때는 중간보다 상당히 낮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직 베트남 여성만이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에 비해 더 나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설동훈, 2006).

13) 관리방식은 국적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내에서 외국인 아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선족, 한족, 일본여성이고, 가정 내에서 경제권이 거의 없는 경우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이었다(설동훈, 2006)

3)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006년 2만5천 명에서 2008년 5만8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녀의 연령은 6세 이하 57.1%, 7-12세 32.2%로 영유아가 대부분이다<표 6>.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수치는 2007년 대비 2008년에 39.6%로 증가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중 초등학교 재학생이 84.2%, 중학생이 11.7%, 고등학생이 4.0%로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표 6>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구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58,007	33,140	18,691	3,672	2,504
비율(%)	100	57.1	32.2	6.3	4.3

자료 : 행안부, 2008.7

<표 7> 다문화 아동청소년 재학생 현황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05	38.9	760	84.0	18,769	39.6

자료 : 교과부, 2008.4.

다문화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아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비 지원도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면서 오히려 지원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대부분의 외국인 아내들은 나이가 어리고 초혼으로 주변의 관계 지지망이 부족하여 주위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박주희, 2007). 다문화 가족에서도 한국사회의 일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이나 교육은 주로 아내의 몫이 되어, 유아기 교육에서부터 학원문제까지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높지만, 언어능력의 부족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였다.

취학 전까지는 자녀의 학습능력이나 교육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의 학습이해력의 저하나 학교과제 수행시의 어려움 등 자녀교육상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부족,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보이며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이영주, 2007).

조영달(2006)은 이주여성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부족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적하면서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어 자녀들의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은 사교육 중심의 한국 교육문화에 대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자녀에게 모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 줄 것인지 아니면 한국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것인지 혼란스러워 했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 성장과정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생활차이가 정체성과 가치관 혼돈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들은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어의 서투름으로 인한 이질감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차별과 집단 따돌림을 받는 등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하성 · 유진이 · 이장현, 2007).

4) 친척, 이웃과의 관계 및 사회적 편견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는 실제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사회의 성원

1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상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여성은 한국에서 2년 이상 머물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주 여성의 가구 전체 소득을 재산정해 보육료 지급 비율을 조정한다. 현재 보육료는 모두 5단계로 나뉘 4인 가구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월 가구 전체소득이 151만원 이하이면 보육료의100%를 지원받고, 월 소득이199만원 이하 이면 80%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국적을 취득하는 이주 여성의 건강에 큰 무리가 없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루 소득을 3만160원씩 산정해 9~13일치의 '추정소득'을 가구소득에 포함시키는 것. 이러다보니 실제직업이 없는 이주 여성들도 월 27~39만원을 버는 셈이 돼 결국가구소득이 느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물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지만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고 학력 수준이 낮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이주 여성들의 현실정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외국인 아내들은 자신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곧 ‘한국인’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은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의 범주에 자신들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한건수, 2006). 이웃에 사는 한국 사람들조차도 이주여성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 자신 또한 이웃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잘난 척하기도 하고, 주변의 이야기나 텔레비전 보도를 통한 한국인들의 편견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무조건 돈을 위해 한국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도망을 갈 것이라는 생각, 일방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하고 이들의 행동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편견은 한국인 남편에게도 확대된다. 즉, “오죽했으면 외국인과 결혼을 했겠는가?” 하고 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시하여 종종 자신의 국제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김영주, 2006).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의 가족을 벗어난 친족망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경우, 인근에 사는 친척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왕래가 없었으며, 심지어 명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더구나 친척의 관혼상제에 혼자서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대부분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혼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적은 점도 있지만, 한두 번 단체로 참여한 후에는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더 이상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한건수, 2006).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 역시 명절 외에는 시댁 친척과 왕래를 많이 하지 않았고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도시 지역 저소득층의 경우 남편의 형제들과 왕래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김현미, 한건수, 2005).

3. 다문화가정의 욕구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82%) 공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이주여성들의 조사(이윤애, 2004)에 따르면 이들이 원하는 주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실(24.3%) 가장 원했으며, 직업 및 기술교육(19.1%), 한국요리교실(16.5%), 한국의 전통 및 풍습, 예절에 대한 교육(14.1%) 순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어교실에 높은 욕구를 보이는 것은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언어능력을 여기고 있으며, 모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언어능력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실과 마찬가지로 한국요리 교실이나 한국의 풍습 및 예절교육에 대한 욕구는 생활과정에서 경험하는 식생활, 명절, 예절 등에 대한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원하고 있었다(이윤애, 2004).

우리사회에서 일반화된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여성들은 컴퓨터교육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양육과 거리상의 이유로 활동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컴퓨터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문화 가족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요구하기 보다는 아내의 문화도 받아들이려는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남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부인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1순위로 들었고, 다음이 부인 국가의 언어교육,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이나 자녀양육 및 지도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영역이 사적 영역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들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적응 교육이 요구되며, 아내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이해,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남편과 시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은 각국의 문화 특히 가족관계와 성별역할구조, 여성들의 활동상 등을 이해하고 이를 다문화 가족 내에 수용하여 발전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김이선, 2006).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매우 높은 공감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의 연결 또한 매우 중요하다.

2) 일과 취업에 대한 욕구

결혼이주여성들의 일과 취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82%가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85%가, 농촌에서는 73%가 취업에 대한 의향을 밝히고 있어 취업의 욕구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설동훈, 2006).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 충당, 자기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본국의 자신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금해, 2005).

보건복지부의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2005)에서 도시 농촌 모두 여성 결혼이민자의 60%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¹⁵⁾, 이것은 2005년 5월 내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1%와 비교해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9%정도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유형의 절반이상이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 서비스직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2005). 그것은 언어구사가 어렵고, 학력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는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언어소통의 문제와 자녀양육문제(31.5%), 남편이나 시댁식구의 반대(13.5%), 마땅한 일 자리를 찾지 못해서(12.7%)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이순형, 2006). 이들은 어느 정도 아이가 다 크고 그 사이 한국어를 배워서 언젠가는 취업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은 컴퓨터 자격증이었고, 조리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을 선호하였으며 이 외에도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외국인 아내가 외부에서 취업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농사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았고, 여건이 변화한다면 농업 인력으로 남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이순형, 2006; 김영주, 2006).

15) 국적별로는 중국한국(77%), 필리핀인(73%), 태국(63.2%) 순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정부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42.9%가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는 현재의 농사품목과 관련하여 더 앞선 기술을 전수받거나 수익이 높은 작물의 재배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형, 2006).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앞으로 적극적인 영농지원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들이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자녀보육에 대한 지원욕구를 살펴본 결과 보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자녀의 한국어 교육, 자녀의 학습 및 놀이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는 ‘방과 후 학습교육’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자녀학습지도와 관련한 정보제공’, ‘자녀의 한국어교육’ 순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김영주, 2006).

외국인 엄마들은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들 또한 되도록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지만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엄마들은 자녀들의 학습, 특히 국어과목과 국사, 사회과목과 같은 교과목의 학습지도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어 과목은 물론 국사나 사회과목에 많이 나오는 한국의 문화나 관습 역사에 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가르쳐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또한 자녀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과정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들의 학습훈련과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여성결혼이민자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체계적, 구체적인 제공이 요구된다.

아동들에게는 자신감 결여와 원활하지 못한 친구관계 등 적응상의 문제를 겪을 경우, 개별 상담이나 또래와의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긍정적인 역할모델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취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이영주, 2007).

4) 공공지원에 대한 욕구

다문화가족은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18%만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82%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지원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지원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지원을 받고도 별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 경우가 39.4%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현실적인 요구에 맞는 지원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이순형,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설동훈, 2006)에 따르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공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나 제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아내로는 일본여성이, 그리고 가장 인식도가 낮은 외국인은 베트남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여성은 79%가 “정부의 빈곤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 등을 알고 있었다. 조선족 여성도 50% 이상이 의료비나 유아 보육료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고, 45%는 여성 긴급전화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반면 필리핀 여성과 베트남 여성은 29% 여성만이 ‘여성 긴급전화’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서 많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교통이 편리한 도시지역과 시부모와 남편의 지원으로 외출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거주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진 외진 지역으로 교통이 여의치 않거나 가족들의 폐쇄적 태도로 서비스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거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심화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보다 안정된 생활을 획득하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4. 소결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민족과 이들의 언어, 습관 및 다양한 문화나 가치 등을 한 국가에 공존시키는 사상과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정책적, 학문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지원정책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여러 측면의 생활실태와 욕구,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등의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은 크게 1)언어와 문화적 적응 문제, 2)경제생활 어려움, 3)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 4)친척, 이웃과의 관계 및 편견으로 나타난다. 언어의 차이와 기후, 음식, 예절, 풍습 등 생활전반에 걸친 문화적 차이의 적응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며, 특히 한국의 가부장제적인 관습과 문화로 인한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며느리의 업무과중, 시부모의 간섭과 효 강요 등은 사회주의 국가와 모권이 강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 아내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199만원인 경우가 50%이며, 월 평균 소득은 171만원으로 조사되어 한국사회 전체가구 소득의 59%에 불과하고(여성가족부, 2006),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소득으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2006).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용의 부담 뿐 아니라 자녀의 언어발달이 늦고 학습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현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친척, 이웃으로부터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 무시하거나 사회적 편견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욕구는 1)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2)일과 취업에 대한 욕구, 3)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 4)공공 지원에 대한 욕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한국어 교실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직업 및 기술교육, 한국요리교실, 한국의 전통 및 풍습, 예절에 대한 교육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애, 2004).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아 미취업자의 82%가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고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높았

다(설동훈, 2006). 취업희망 이유로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 충당, 자기 발전, 본국의 자신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금혜, 2005).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보육비 지원, 자녀의 한국어 교육, 자녀의 학습 및 놀이지도, 자녀학습지도와 관련한 정보제공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김영주, 2006). 국가 또는 민간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을 받은 비율은 18%이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을 받고도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39.4%여서 이들의 욕구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순형, 2006).

2장에서는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 등 문헌 고찰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 및 현황을 검토하고,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에서 시사하는 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등장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욕구에 기초한 국가 정책, 사회적 지원방안 등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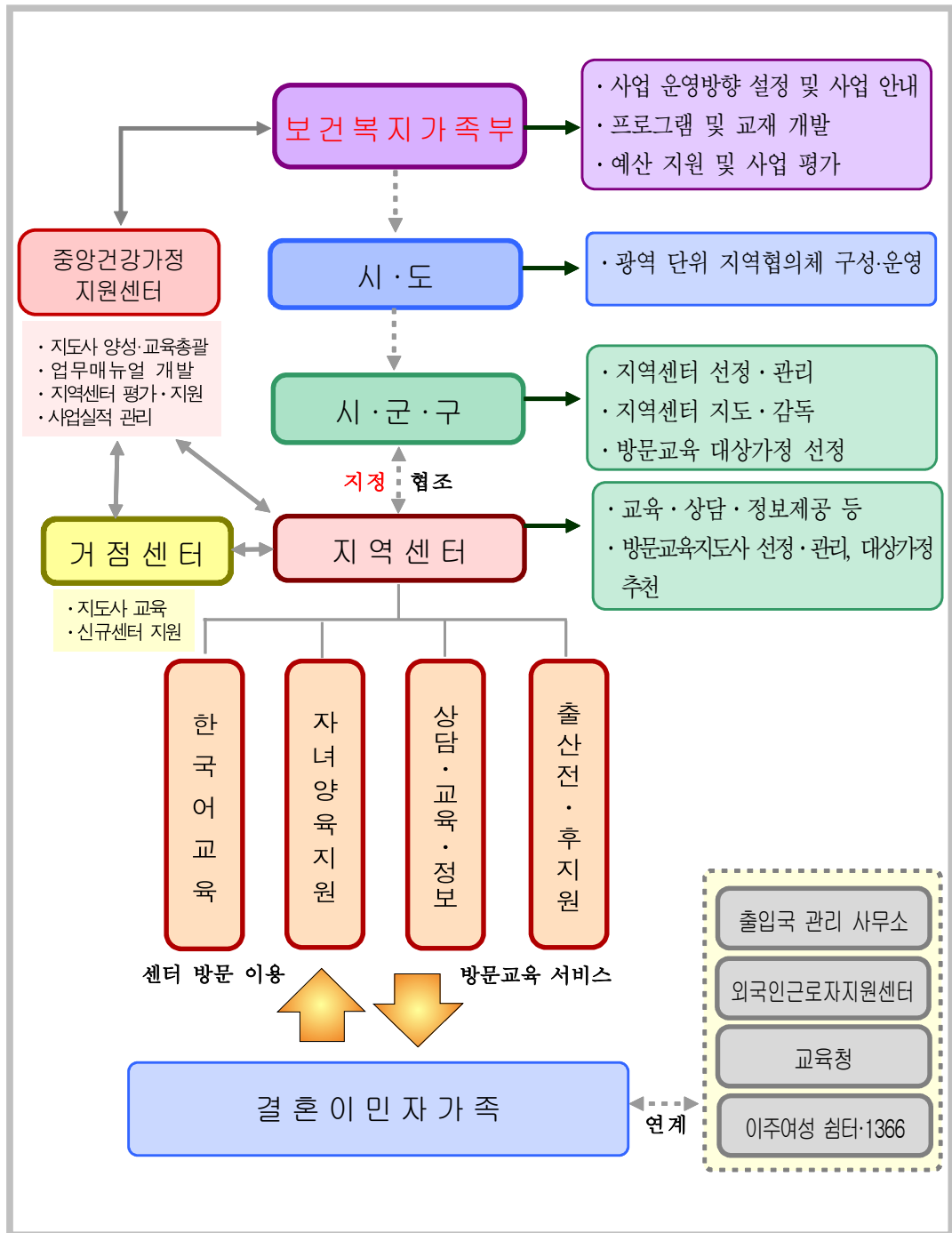
1) 보건복지부

신정부의 개각이후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주관부처로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등의 부서에서 사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변화의 하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3월 21일 공포, 2008년 9월 22일 시행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이를 근거로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칭·확대되어 전국 총 80개 센터에서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1개소당 사업비 50백만원 지원). 이처럼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센터의 인력확대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종사인력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167억원)으로 한국어 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글교육과 자녀를 위한 맞춤형 아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21억원)으로 결혼이민자 정보제공, 영농기술교육, 결혼예정자 사전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10월에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림 1>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이 대책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보건복지가족정책 전체를 포괄해 향후 2·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내 10개 국(관), 21개 사업부서 정책이 포괄되어 있다.

정책목표로는 정책대상별로 ①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②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③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④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규정 신설로 국제결혼 피해방지대책 마련('09년 법령개정 추진) ②다문화가족센터의 통역요원 파견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 ③언어습득기 아동을 위한 언어치료사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④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별 교육강사 파견 등이다. 국내에서 창업하기 위한 창업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창업 기업의 형태로 보면, 개인 기업 혹은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느냐에 따라 그 창업절차가 달라진다.

이러한 추진과제의 주요특징은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배우자교육, 가족통합교육, 부모자녀프로그램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다양화했으며,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보육 및 성장지원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등록·제공 시스템 정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핵심전달체계로 확대 설치,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을 방지해 사업 효율화와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과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표 8〉 가족 생애주기별 7대 과제

주기	결혼 준비기	가족 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가족역량 강화기	가족 해체시	전(全) 단계
정책 과제	결혼중개 탈법방지 및 결혼예정자사 전준비 지원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다문화가족자 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해체 다문화 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10

① 결혼준비기 :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결혼중개과정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 제공 의무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간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하여 사전 프로그램 이수 결혼이민자 입국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 국적별 자조모임과 연계해 초기통역·정서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이다.

② 가족형성기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통·번역 요원 파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복지콜센터에 외국어 가능 인력을 채용해 다국어 상담 및 연계서비스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통역서비스 실시를 위한 시범보건소를 현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요원 파견서비스를 활용하고 부모나 학교 등의 요청 시 통역요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특례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③ 자녀양육기 :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신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교육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를 추진하고 부모-자녀간 자긍심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검토하였다.

④ 자녀교육기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 지원

취학 전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등 특별활동 실시하고 언어치료사를 파견하여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를 방과 후

다문화 특화시설로 활용한다. 언어별 교육강사(결혼이민자 활용)를 양성하여 보육시설,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이용기관에 파견한다.

⑤ 가족역량 강화기 : 결혼이민자 경제·자립 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취업·창업지원을 위해 지역 및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을 개발한다.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취업전담 지원기관 및 정부기관·지자체간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중앙에 다문화가족 생활불편 해소창구 개설 및 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⑥ 가족해체 시 :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혼사유 및 이혼 후 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무연고 방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문화 아동청소년 전담 동반자를 육성해 전담 보호한다.

⑦ 전단계 :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체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등록·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어교육, 산전·후 건강관리, 자녀양육지원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E-mail, 전화,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안내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대 운영('08. 80개소 → '09. 100개소 → '10. 14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인프라 간 프로그램 지원·연계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멘토링 서비스, 자원봉사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민간단체-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으로 사업연계를 강화한다.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과 문화 다양성 존중의 차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 및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법원행정처)와 협의 추진하고 16개 시·도별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으로 '다문화 홍보대사'를 위촉, 각종행사시 다문화 홍보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본 대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및 부처, 지자체, 관련기관들과 협의·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중장기 추이 및 영향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차원의 정책수립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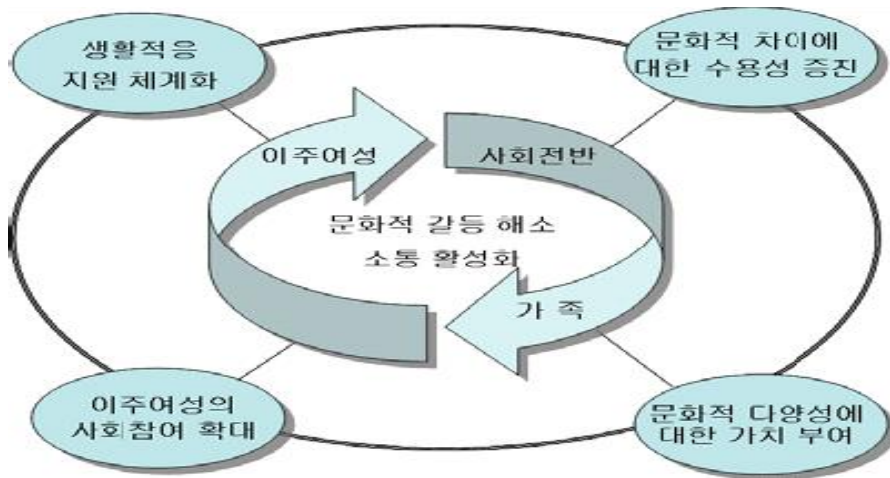
2)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책은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관련 정책을 추진한 2000년대 이후 시작하여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총괄기능을 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주된 정책들은 각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일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내용으로는 여성 이주노동자와 성산업 유입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사업 지원,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과 상담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이들을 위한 쉼터 설치 등이다. 그 후, 2005년 들어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지원 외에 일반적인 결혼이주 여성의 생활적응사업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김이선외, 2006). 이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사업과 결혼 이민자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가족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한국어교재와 모성보호가이드 편찬,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생활상담, 출산도우미 파견 사업 등과 문화유적 탐방과 문화축제 참가, 요리교실, 전통문화체험(다도, 한복체험, 민요배우기, 민속놀이 배우기)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각종 단체와 기관에서 실시해오던 사업을 체계화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보급 기반을 구축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특화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전국에 총 21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수립, 이주여성단체, 종합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 20개 기관에 센터기능이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후, 2008년 개각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변경되면서 가족정책 관련한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다문화가족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의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

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에 의거, 1998년을 시작으로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을 계획하였다.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기간은, 제1차 1998년~2002년, 제2차 2003년~2007년이며 3차는 2008년~2012년까지가 해당된다<그림 2>.



〈그림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출처 : 여성부

제3차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중 다문화가족관련 과제는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이며 이에 대한 소관부처는 <표 9>와 같다.

〈표 9〉 사회통합과 평등문화정착 과제별 해당부처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소관 부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문화재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3)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에서 비롯되었다. 추진배경 및 목적으로는 ①우리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필요 ②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의 방지 대책 마련 ③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이었으며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정책대상이었다.

이어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에서는 부처간·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권 보장 등 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중앙 다문화교육 센터'를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 연구, 한글 교재 등 자료 개발, 교원 연수 담당 핵심요원 양성 등의 맞춤형 다문화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0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지원방안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가와 지방이 추진할 4대 과제로 (1) 다문화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지원 (2)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 (3)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4)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여 총 14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총 7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매년 단년도 계획을 수립·추진해왔던 이전과는 달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세움으로써,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잠재인력정책과에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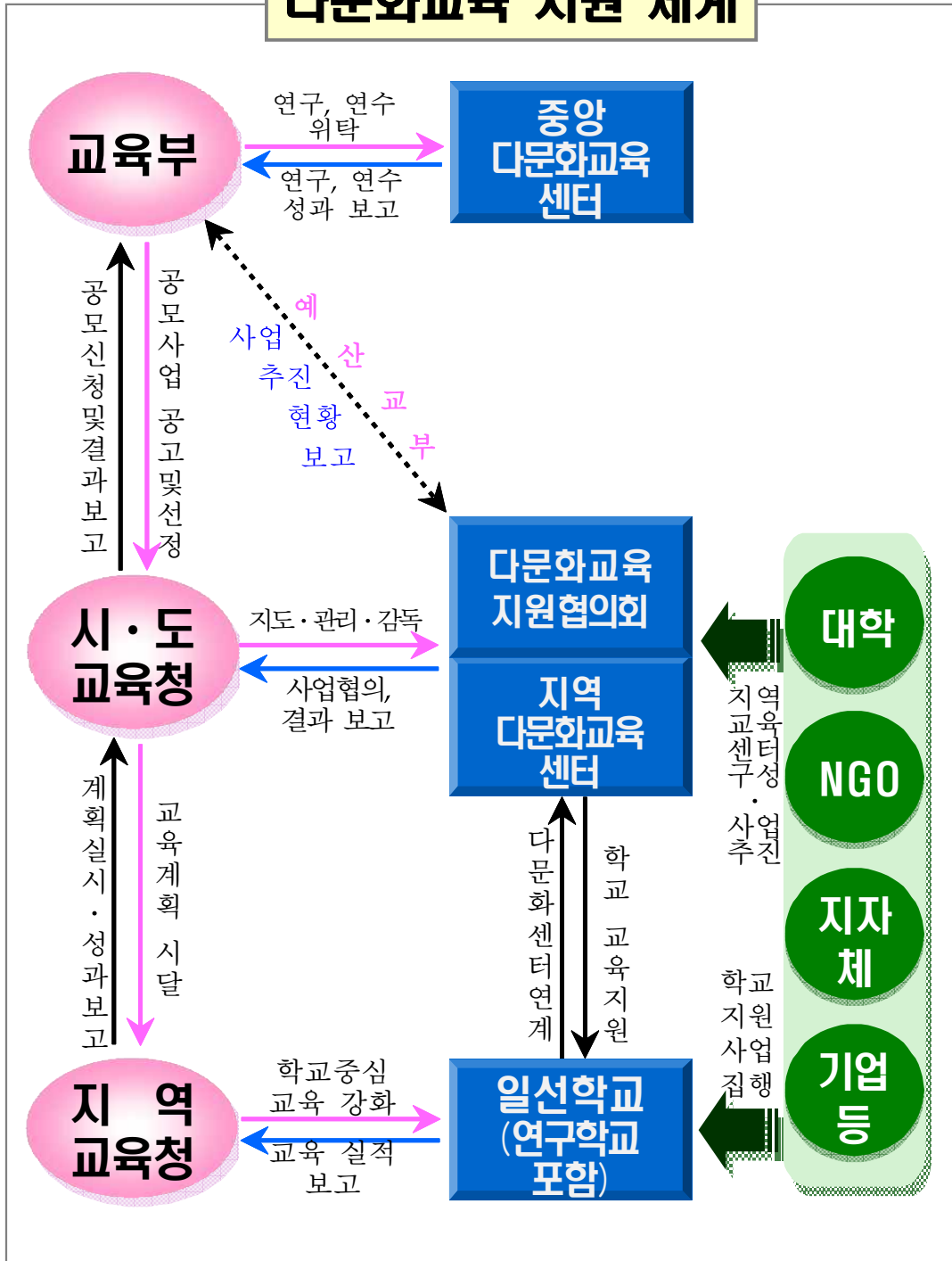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해왔던 다문화가정 사업은 주로 학교중심의 교육 지원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는, ①교사용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 발간·배포 ②시범학교 운영('06년 2개교, '07년 12개교) ③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교재 개발·보급('06년 6개, 교육청 23

중) ④한국어(KSL)반, 방과후 학교 운영('06년 실적) 등이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국제이해 교육을(10개 교육청) 실시하였다.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는 부산 등 10개 교육청에서 '외국학생 입학상담 센터'를 개설하여 국내학교 편입학 절차,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인적 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지자체·교육기관·대학·산업체·연구기관·시민단체·언론 등이 연계하여 다문화 구성원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의 발간사업을 실시하였다.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방안 발표에 따르면, 향후 교육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유치원에 보급함
- (2) 방과후 학교, 방과후 멘토링 : 국어능력 부진학생의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으로 교과지도·숙제지도를 받게 됨.
- (3) 다문화가정 학부모·학교생활 안내책자 (한국어 및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다언어로 제작)를 제공하고 「자녀행복교실」을 통해 한글과 한국 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
- (4)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에 개발·보급.
- (5) 교장, 교감, 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이해 연수 과정'을 개설함.
- (6)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를 위하여 '09년 이후 전국 11개 교대에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함.
- (7)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우수 교사·단체를 선정·표창함.
- (8) 교과서에 타문화 이해·존중, 관용 등 다문화 요소를 반영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
- (9)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 (10)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촉진을 위하여, 다문화 이해 영상물을 제작, 전국의 학교에 보급.
- (11) 다문화교육 관련 수기, UCC 공모 등 다문화교육 체험공모전을 실시하여 사회 전체의 다문화 인식 확산 등이다.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그림 3〉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지방문화원 등,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과 문화교육 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어·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이 교육은 총 34개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단지 언어교육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나들이, 결혼이주여성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장터 등을 통해 서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여 왔다. 지금까지 주로 진행해왔던 사업을 정리해보면 ①한국어 교육, 다문화체험 지원, ②이주노동자 종합축제, 문화가이드북 발간, 이주노동자 다문화 청년캠프, ③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④이주민 대상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2007년 11월에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다문화포럼(2월),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4~5월) 등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이주민의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진흥기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이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 협력망 구축 등을 계획하였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이나 이미 정착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해 새내기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였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제정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변화요구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진흥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표현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의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관용, 협력을 존중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며,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다문화 사회에 따른 문화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 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적 다양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5) 다문화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해 한국다문화진흥원을 설립함.
-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함.
- (7) 문화적 고유성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지원,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야 함
-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공간 등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10)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박물관·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을 설립하고 다문화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 (11) 이주민 등과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어 교원과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주민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하도록 함
-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국적·민족·인종 등으로 인해 문화적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13)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다문화 교류를 지원 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5)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수산식품부에서 다문화가정 관련정책 주관부서는 농촌정책국으로 농촌사회여성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과 기초적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①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②'우리 엄마의 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 찾는 농촌살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의 발간 사업 등이 있다.
- (2)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 실시('08년) 및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이주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09년) 도입을 추진하였다. 세부사업으로 ①기초 사회적응 훈련을 마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중 영농희망과 정착의지가 강한 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기초영농교육 실시 ②지역사회의 여성농업인을 활용, 영농기술교육 및 농촌적응을 지원하는 1:1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 계획 등이 있다.
- (3) 농협, 농업연수원,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①모범가구 모국방문 지원 등의 복지 지원 ②다문화여성대학 운영 ③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60쌍)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④보육도우미, 생활상담 등 여성농업인단체회원 중 심의 적응 지원 등이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7년 1월에 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을 공고한 바 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방문교육도우미의 선발·기본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①방문교육도우미 선발 ②방문교육도우미 기본교육, ③방문교육도우미에 대한 교육자료 지원 등 ④한국어 교육, 소그룹 교육 등에 대한 확인·평가 ⑤모범가정 격려행사 지원 ⑥방문교육도우미 교재 지급 ⑦방문교육도우미 유니폼 및 신분증 ⑧방문교육도우미 활동일지 제작 보급 등이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하여 농어

촌문화미래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하였다. 농어촌문화미래연구소의 기능은 인종간의 문화를 접목한 창조적, 선진화된 품격 있는 농어촌문화와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을 통한 복지 향상, 희망, 화합을 이끄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6) 노동부

노동부의 2007년도 ‘여성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세부계획’에서 보면 노동부 소관 과제 중에 직업 상담 및 공공 서비스 부분으로의 진출 지원이 표기되어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 사업의 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알선,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통역서비스 제공,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이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희망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고용지원센터에 통역요원 배치 등의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2007년 현재 중국어 등 10개 국어로 언어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를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일자리 사업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8년도에는 노동부 국정지표 자료에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확충안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업의 주관부서로써 위치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4년 12월에 개소되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사업

다문화지원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과 국제결혼이민자들의 즐거운 한국생활을 위해 교육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수준별 학습의 진행,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을 갖춘 한국어교육,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귀환프로그램의 일환인 PC정비반과 영어, 태국어 등 외국어 진행반을 갖춘 컴퓨터교육, 태권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기로 진행되는 특별교육에 법률, 안전, 국악, 금융, 영양교육이 있다. 최근에는 2008년 10월에 외국인 경영자들이 우리나라의 변화된 노사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에서 직접 경영활동을 하면서, 법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2) 상담사업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사업장이동, 비자연장, 강제적립금, 여권압류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 각종 행사 사업

공동체와 문화행사의 형태로 각 민족들의 고유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에 실시한다. 그동안 실시되어온 행사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예체험학습,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관광, 박물관 견학, 문화 봉사활동 행사, 한국의 전통놀이·민속놀이 대결, 전통 음식 만들기 대결, 한가위 문화축제, 설날 대잔치 등이 있다.

7) 법무부

법무부 여성정책과(현 여성아동과)에서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로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및 외국인 신분에서 따른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기존 제도나 법률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인권 보호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국적취득, 이혼과 국적문제, 여성관련법률, 상담기관 안내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록되어 있다.

법무부의 주된 외국인 정책 성과로는 우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심의·조정기구 설치, 총괄추진 기구 설치 등의 정책의 총괄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것들을 수 있다. 이 중,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 처우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실어주었다. 더불어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07. 5.)하고,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도 시행되었다. 또한 '09. 1월 이후 전국 20개 기관에서 시범·도입 예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다문화이해 및 이민자를 지원하는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 체계화하여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귀화희망 외국인 및 국민(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5단계, 언어과정,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사회통합팀의 업무 사항을 보면, ①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 ②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③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④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⑤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이다.

2008년에는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제도화'의 항목안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한 지역에는 지역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센터,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등이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지방행정연수원에는 다문화사회 관리과정이 신설되어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실무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내거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국인과 차별 없는 혜택을 받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07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확대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거주외국인 지위를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정하는 표준조례안을 명시하였다.
- (2) 지자체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업무추진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의 세부추진 사항으로 지원 사례 모음집 및 업무편람을 발간·배포하고 실태조사 실시, 우수 사례 발표회 등으로 지

자체 추진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 (3) 정부 최초의 동남아 여성결혼이민자 부모 초청행사('07.12)를 통한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 및 우수사례 전파, 국가이미지를 개선하였다. 추진사업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친정 부모를 초청하여 가정방문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자료집을 발간·배포하였다.
- (4) 언론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부모 초청행사를 보도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 (5) 관련 간담회 및 워크숍, 포럼, 업무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평,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였다.
- (6)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인 담당공무원 순회교육 실시, 지자체 국제화 재단과 공동으로 시·도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시·도 공무원 교육원의 다문화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였다.
- (7)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매뉴얼 개정·발간하고 프로그램 매뉴얼의 수정·보완 및 실태조사 매뉴얼의 추가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한편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의 참여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8년 현재 각 지자체별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시행계획들을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사업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 결혼이민자 가족센터)를 통하여 교육, 상담, 자녀양육, 역량강화, 문화·정서적 지원, 홍보·네트워크 형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표 10>.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에서 제기되는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한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양육 상담, 사회·문화적응 지원사업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전국 16개 시·도 지방자치

별 2008년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정책 현황으로, 공통적인 사업외의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사업 분류	세부 사업
교육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 -국적별반,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한국어강사(도우미)양성,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등 가족통합교육(결혼이민여성, 배우자, 시부모 대상 프로그램, 부부, 부모자녀 대상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상담 지원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부부관계 증진 상담
자녀양육 지원	산전·후 도우미, 아동양육지원, 공부방 운영, 심리·정서 치료, 자녀 일시돌봄 서비스, 엄마나라 문화언어 배우기
역량강화 지원	정보화 교육, 직업(취업)교육, 다문화원어민·강사양성, 통번역사 양성
문화정서 지원	친정어머니 및 후원가족 매칭(멘토링)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육성 문화교육, 문화체험, 문화 행사 참가
홍보 네트워크 형성	출신국 문화의 지역사회 홍보 지역내 다문화 축제, 캠페인, 각 관련단체 다문화 교육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수행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1)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다문화가족지원 중장기계획을(중기: 2009-2011, 장기:2011-2020) 수립하고 인권 보호, 생활적응 및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차세대 지원 등 7개 영역에서 50여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민족·다문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부서 T/F 팀을 자치행정국장을 총괄본부장, 도의새마을과장을 총괄지원반장으로 하여 5개반(여성결혼 이민자 지원반, 외국인근로자 지원반,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반, 다문화가정자녀 지원반) 15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개소(공주, 아산, 금산, 부여, 예산)는 국비지원으로 7개소(보령, 서산, 연기, 서천, 청양, 홍성, 태안)는 도비 지원으로 운영하

고 있다.

충청남도의 2008년도 다문화가정지원 유관기관·부서 T/F팀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표 11>과 같고, 총 20개 사업에 8,01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과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타 시·도와 비교해 차별화된 정책현황으로 꼽을 수 있다. 충청남도의 이러한 특수시책 과제는 지속적이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표 11>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량	비고
다문화가정 쌍방향 언어·문화교육	400명	중앙
다민족다문화 축제	3,000명	
다민족다문화가정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16개 시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추진	16개 시군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5개소	
여성결혼이민가족 아동양육 지원	5개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영·유아보육료 무상지원	1,08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설치 운영	12개소	
다국어판 모국어 교재구입	1,500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운영	2개	체육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사업	2개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5개	보건위생과
농촌다문화가족 교육지원	6개	농업기술원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육지원 사업	10개	교육청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친정방문 및 가족초청	10가정	농협중앙회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종합건강검진	600명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전통음식문화체험	300명	
다문화 가정 한국적응 프로그램 운영	16회	새마을회

2) 경기도

경기도의 사업과제 내용을 보면 <표 12>,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한국어 교실 운영 및 방문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② 이민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취업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및 ③ 다문화 축제 등을 통한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으로 사회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계획에서 특기할 점은 아동발달 주기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아동양육 도우미 파견,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과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훈련과정 안내 및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이 있다. 이 외에 결혼이민자에게 생활·법률정보, 관공서 이용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2>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사 업 구 분	세부 추진 사업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및 문화이해 교육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내실화	아동발달 주기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아동양육 도우미 파견
결혼이민자 사회진출 일자리 지원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
취업 교육·상담·연계 등 취업지원 내실화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 훈련과정 안내 및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결혼이민자 소식지 발간	생활·법률정보, 관공서 이용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특성 중 하나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농촌문화 적응교육의 생활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과 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의 영농지도·생활상담 등이 그 예이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료보호사업으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예수병원 등과 연계하여 접근

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을 돌며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국적취득 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 등,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 진료를 도내 5개소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권보호 측면 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쉼터) 지원하여 피해자 일시보호 및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을 통하여 가정 복귀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 시, 군,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청 전주지청, 도교육청 등과 연계한 결혼이민여성 고충상담반의 순회 운영을 통해 출입국, 취업, 보건·의료, 생활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7개 국어로 된 생활안내책자를 배포하여 한국소개, 체류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표 13>.

〈표 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사 업 구 분	세부 추진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상담, 문화이해교육 등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농촌문화 적응교육	생활농업기술, 농촌생활적응, 화목한 가정 만들기 등
결혼이민자가족 방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원	한국어 교재 제작배포 생활안내책자 제작배포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결혼이민자가족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취업기술교육 등)	체육문화행사, 전통문화 체험, 취업기술교육 등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	후견인이 대상가정을 방문, 영농지도·생활상담 실시
결혼이민자가족 어울림 한마당	가족화합체육대회,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 제공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진료(국적 취득 전 이주여성) 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예수병원 등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쉼터) 지원	피해자 일시보호, 피해여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가정 복귀지원 등 수행
「결혼이민여성 고충상담반」 시·군 순회 운영	상담분야 : 출입국, 취업, 보건·의료, 생활안내 등 참여기관 : 도, 시, 군,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청전주지청, 도교육청

이처럼, 전북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건강가족정책 실현가족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4)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사회통합 지원체계의 활성화 사업에 있어 ‘대모 결혼자 어울림 한마당’이나 ‘아시아 음식축제 개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과 여성결혼이민자를 ‘방과 후 원어민 교사 양성’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을 꾀하는 사업은 타 시도와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또한 강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찾아가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이 주2회 이루어지며, 미취학자녀와 대학생 결연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 10개교 운영에서 20개교로 확대 할 계획에 있다. 이 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전용 쉼터·1366센터 운영과 확대, 상해보험 가입 등과 향후의 필요 개선조치로써 전문인력을 충원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눈여겨 볼 점이다<표 14>.

〈표 14〉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사 업 구 분	세부 추진 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체계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한국생활적응지원시스템 구축 대모 결혼자 어울림 한마당 지원 아시아 음식축제 개최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지원 우리말 공부방 운영 사업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방과 후 원어민교사 양성”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강화	찾아가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확대

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표 15>, 다른 사업에 비해 가족화합 프로그램 및 종합 상담이 보다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정착에 가족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으로 인천시의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아동 양육 지원 사업과 더불어 찾아가는 임신·출산지도 서비스를 통하여 산전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출산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15>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사 업 구 분		세부 추진 사업
한국어 교육		기초, 초·중·상급, 연구반 등 총 8개반 운영 한글기초, 일상 대화, 다양한 낱말 익히기, 체계적 글쓰기, 노래 배우기 등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가정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국생활 및 문화체험	한국음식 만들기	반찬, 국 등 한국음식 이론과 실습
	한국문화 교육	생활예절 익히기, 기초 역사 교육
	한국문화 체험	유적지, 명승지 탐방 및 인천시티투어 참여
가족화합 프로그램	가족 교육	남편 및 시부모, 자녀와 함께 하는 강좌 : 부부 소통법, 다문화 이해, 자녀교육법 등
	가족 모임	국가별 자조모임 형성을 통한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가족화합 캠프 등	가족화합 야외활동, 가족캠프 실시 : 자연체험, 게임을 통한 인간관계훈련, 가족간 의사표현법
아동양육 지원사업		양육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결혼이민자가정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동양육서비스 제공 : 아동 학습지도법, 생활지도법 등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찾아가는 임신·출산지도 서비스		산전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출산준비

6) 기타

서울특별시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상담, 문화이해, 방문교육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

사항으로는 ①교육 : 한국어 교육, 부부교육, 가족교육 등 ②상담 :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가족생활 상담 ③문화 : 문화이해교육, 문화체험 나들이 등 ④방문교육 사업 : 아동양육지원 사업, 찾아가는 한글교육 등이 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 '다문화가정 e-배움'으로 가정 내에서 온라인 자율학습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과 후 자녀양육 및 육아교육도우미 등이 필요한 가정을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대학생 학습도우미를 지원하며, 이주여성의 고급 인적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통역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여성의 전문능력 개발사업안에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교육이 포함되어 생활개선회 회원과 결혼이주 여성과의 멘토-멘티 결연으로 다양한 가족문화 이해를 위한 외국인의 밤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 및 가족 특성을 고려한 가족단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보행이 불편하거나 가족 병간호 등으로 출타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영업 등 생계유지 활동으로 출타 시간을 낼 수 없는 결혼이민자를 주 사업대상으로 선정,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친정엄마 맺어주기 사업을 지역방송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양육지원도우미 양성 및 자녀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학습지원, 한글교육, 건강관리,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방문교육서비스에 파견되는 지역별 도우미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도우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다른 지역과 차별적이다. 또한 찾아가는 아동양육서비스에서 출산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산, 육아 및 아동양육 등의 방법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출산지원,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육아교육, 자녀양육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이해 교육사업 중에 한국요리, 생활예절 교육과 더불어 고적답사 및 한옥체험을 실시하였다.

강원도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의 부부연수회 개최를 특강 가족관계증진을 도모하고, 부부연수회 내용으로 특강, 집단상담, 현장견학 서비스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

계, 이주여성과 한국주부와의 결연사업도 눈에 띄는 정책이다.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의 한국어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3개 시군에 시범실시 후 전 시군으로 확대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발전센터가 주관한 다문화상담 전문화과정 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으로 프로그램 무료제공 및 중고컴퓨터 보급 등의 정책 실시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은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기관인 한국디지털대학교와 공동협력추진협약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언어습득, 시댁갈등해결, 임신 육아 등에 대한 조언 충고를 위한 친절 만들어주기 멘토 결연사업도 여성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회원간 자매결연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한국디지털대학교가 주관하고 포스코와 고려대 국제어학원이 후원하는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의 연중사업을 통해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을 5개 국어로 제작된 콘텐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 민속경연대회, 가족 어울마당 등 다문화가정 가족 한마음 대축제를 열어 모국 문화교류를 통한 화합의 장 마련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또한 한국 체류기간 2년 이상 된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법, 부부인성교육 등의 부부공동체훈련의 지속적 추진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간의 만남의 장을 통한 연대감 형성 및 심리적 안정도모하고 있다. 이외에 보건소, 학교, 병원, NGO, 언론사, 경찰서등과 협의체 구성,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 구성 등이 특징적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원활한 사회 적응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어민 강사, 자녀 방문한국어 교사를 양성·활용하는 사업을 경남 도교육청과 방과 후 학교 파견 협약 체결로 실시하고 있다. 매년 50명씩 2010년까지 200명의 결혼여성이민자 원어민강사 양성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한국어, 교수기법 등을 교육한 후 지역아동센터의 외국어교사로 활용하고, 방과후 학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사회통합 지원체계 활성화,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경제적 자립지원,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강화 등 일반적인 사업범주 안에서 다문화가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산·전후 도우미, 친절어머니(멘토) 및 후원가족 매칭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3. 민간단체의 지원정책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 전국의 80개소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주관부처였던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한국사회의 조기적응 등, 사회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를 최초로 설치·운영하고, 2007년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를 관리기관으로 위탁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사업을 지원하여 왔다(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업무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개소 21개, 2007년 36개, 2008년 80개소로 점차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5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거점(서울/인천/경기/제주), 2거점(대전/충청권/강원), 3거점(경북/대구), 4거점(울산/부산/경남), 5거점(광주/전북/전남).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발표(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보도자료, 2008년 10월 31일)에 의하면 2009년 100개, 2010년 14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2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단법인 17개, 사회복지법인 14개, 비영리 민간단체 10개,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 특수법인 4개, 재단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전북이 각각 1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경남이 9개, 전북 7개, 강원 6개, 충북, 충남이 5개 순으로 나타났다(부록 참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을 구분하여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통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생활상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적 특색 및 이용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7년도 각 사업별의 운영실적은 <표 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간 참여 인원은 277,926명이며 공통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특화사업으로는 자녀지원, 문화정서지원이 많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통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교육은 왕초보반, 초보반,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국적별 결혼이민자 한글반, 교재 연구반,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한국어 강사 양성반 등 지역

특성 및 센터의 역량에 따라 수준별로 운영되며, 한국어 테스트를 통해 진급을 하거나 수료를 하게 되며 수료한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에서 교육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결혼이민자 및 가족들이 만족도가 높았고, 한국어능력이 뛰어난 소수국 출신 결혼이민자들을 보조강사로 활용하여 호응이 높았다. 한국어실력이 향상된 결혼이민자들은 통·번역사 및 상담자 보조역할 등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향후 캄보디아, 태국, 네팔 등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역인프라 구축 및 출신국 언어-한국어사전 및 한국어-출신국 언어사전 등 관련 자료 확충이 필요하다.

〈표 16〉 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실적

구분 일자	참여 인원	공통사업			특화사업					총합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교육	상담	문화정서 지원	역량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	자녀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3.31 (월별)	실적	8,341	804	711	931	322	－	220	30	11,403
	소계	9,856			1,547					
6.30 (누계)	실적	63,877	7,451	4,242	11,028	6,400	1,930	6,602	887	103,289
	소계	75,570			26,847					
9.30 (누계)	실적	115,786	16,363	9,107	20,316	12,050	3,615	125,192	1,393	193,822
	소계	141,256			54,566					
12.31 (누계)	실적	143,029	18,099	21,804	24,404	20,151	17,109	25,716	7,614	277,926
	소계	182,932			94,994					

가족통합교육의 사업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부부프로그램, 고부간 프로그램, 부모자녀프로그램, 가족캠프,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배우자 교육 교실이 있다. 가족통합교육은 결혼이민자가족 구성원들이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습득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부부교육을 통해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올바른 성관념을 갖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문화적, 세대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

상담은 가족관계 및 심리상담, 자녀양육 상담, 건강상담, 법률상담, 정서지원 및 정보제공 상담 등 다양하다. 상담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상담을

통해 결혼이민자 내부 스트레스 완화와 자존감 향상으로 가족관계가 원만해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자원으로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앞으로 상담전문통역사 또는 자원봉사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생활교육, 정보화 교육, 취업교육, 자조집단 운영 등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춘 특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정서지원사업은 국적별 배우자·시부모 자조모임 결성, 멘토-멘티 맺기, 가족축제, 가족영화제, 한국음식 만들기나 음악회,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요리교실, 한국 동요, 가곡, 가요, 세계 민속노래 배우기, 공연실시, 가족사진촬영, 문화체험 및 역사탐방 다문화가족여행/문화 활동 및 취미교실, 건강검진 및 건강강좌, 자녀보호사업, 육아휴게실운영, 모국 의상 소개와 음식 판매, 결혼이민자 합창단 운영, 연극반 운영, 발맞사지, 미술치료, 재즈댄스 반/ 부채춤/ 생활요리/ 종이접기/ 뜨개질반/ 봉사연계, 지역 독거노인 및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말벗 도우미 봉사활동 등이 있다. 문화정서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 구성원들이 쌍방향적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서로 간의 문화차이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많고 다문화의식 개선·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내용으로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영어뮤지컬 교육, 의류리폼, 정보화교육, 원어민강사양성·통역사 양성·다문화강사 양성·한국어강사 양성과정, 미용교실, 산모도우미 교육, 원동기 면허 취득반이 있다.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강화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양성교육 및 정보화교육, 제과제빵이나 피부관리 수공예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었다.

다문화인식개선사업으로는 다문화 사업 담당자에 대한 인식 개선 토론회 및 포럼개최, 인식개선 홍보 부스 운영, 전통혼례시연 등이 있다.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은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며, 다문화축제, 다문화교육, 인형극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자녀지원사업 사업내용으로는 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태파악,

한국말이 미숙한 결혼이민자가 자녀에게 동화를 읽어줄 수 있도록 구연동화 프로그램 실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미술작업을 통한 부모교육, 부모교육시 자녀보호 및 놀이지도, 다문화 국제언어교실, 다문화 청소년연극교실이 있다. 이와 같은 자녀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기게 되었으며 센터 교육에 참여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영어·엄마나라 언어교육, 특기 교육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결혼이민자 부모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건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아이돌보미 지원, 학교생활적응지원, 방과 후 학습지도, 심리치료, 모성보호 지원(출산 전후 출산/육아/가사를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등이 있다. 향후 개선안으로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녀들이 아직 어리므로 자녀보호를 위한 유아방 마련과 아이돌봄 자원 봉사자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찾아가는 서비스로는 찾아가는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교육(매주 2회씩 파견 실시), 찾아가는 배우자교육 및 자조모임, 찾아가는 가족상담이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센터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혼이민자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찾아가는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교육, 가족상담 등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능력을 향상시키고 말뼉이 되어 줌으로써 심리·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가족들의 센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비, 진행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기타사업으로는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부 또는 관련단체, 관공서 등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관련 정보 교류 및 동향 점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홍보활동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피해 구조·지원 사업으로 가정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등에 피해 구조를 위한 지역내 연계체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담당 종사자는 센터 내방자, 외부기관 연계자, 기타 가정방문시 상담 등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가족갈등, 이혼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보호 결혼이민자에 대해 외부기관 연계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여성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예술팀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실시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거리감을 없애고 있다.

2008년도 이후 향후 사업방향으로는 (1)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가족상담 등을 하는 방문교육사업 확대, (2)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육아관련 서비스 제공 및 센터 이용시간 동안 자녀를 일시 돌봐 주기 위해 육아휴게소 시범운영(10개소), (3) 방문교육사업 관리 및 신규센터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거점센터 선정·운영(5개소), (4) 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 기준 및 센터장 자격기준 강화 등 추진되고 있다.

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0년 10월 창립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단체로 창립 당시에는 “외국인 이주여성 노동자의 집”으로 출발하여 이주여성노동자 쉼터를 중심으로 이주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의료지원,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 임금체불 등의 노동 인권상담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인권문제가 이주여성노동자들 보다 심각한 것을 직시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의 권익증진,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이주여성의 지도력 개발을 통한 자조그룹육성, 성/인종차별, 민족/국적의 차별을 넘는 다민족공생사회로의 시민인식전환, 자매애와 연대를 통한 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구축하는 것을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크게 이주여성의 인권보호활동, 적응지원활동과 정책개발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1) 인권보호활동

가. 상담활동

①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이 많다. 여성

가족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12%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여성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상담은 전화상담/ 면접상담으로 나누어진다. 전화상담을 통해서 면접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만나서 상담을 하고 체류나 국적취득 등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결을 하여 법률지원을 하며, 내면치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치유 전문가들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② 다문화가족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이주여성 상담에서는 무엇보다 그 가족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대부분 한국사회에 오는 이주여성들은 사회주의권 출신으로서 우리보다 평등한 문화와 지위를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캠프를 통하여 평등가족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2006년에는 “다문화가족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매뉴얼: 소통과 동행”을 발간하기도 했다.

③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프로그램

한편 상담활동과 연계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이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법적 장치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방안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003년 이주여성을 위한 성교육을 네팔어와 몽골어로 실시했고, 국제결혼자녀를 위한 성폭력예방 교육 자료집(2003년), 이주여성 생활·법률매뉴얼 ‘이런 건, 궁금해요’ (2005년)를 베트남, 중국, 러시아어로 발간하기도 했다.

나.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운영

현재 한국에는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쉼터는 많이 있으나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는 전국에 몇 곳 안 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2001년 이주여성을 위한 전용 쉼터를 시작하여 민간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통역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숙소도 가급적 나라별로 방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 거주하는 동안 숙식제공은 물론 한국체류에 필요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아기를 동반한 여성들의 입주가 늘고 있다.

(2) 적응지원활동

가. 교육·문화 활동

① 의사소통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국어교육이다. 센터에서는 2002년부터 외출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고 2005년부터 교실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가정방문 한국어교육은 2005년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서비스의 모델이 되었고, 여성가족부용역으로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초급교재'도 개발하였다.

② 배우자를 위한 베트남어 교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내 나라 말 배우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해 오는 여성만이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배울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도 배우자 나라 언어를 배우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에 비해 남편들의 참여도와 열성은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③ 생활문화교육과 이주 여성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험도 고궁이나 전통문화 보다 요즘 한국인들이 찾는 연극, 미술관, 음악회 등을 찾고 때에 따라서는 음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가미하는데 2달에 1번 정도 실시한다.

④ 이주여성지도력개발을 위한 열린 학교와 자조집단 육성 프로그램

이주여성지도력 개발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한국어가 가능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3년을 목표

로 여성의 지도력을 육성하여 한국에서 당당히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
국여성의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한국생활 이모저모, 생활경제, 여성의식화, 민주시민양성, 리더십 개발 과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주여성의 지도력 육성은 서로를 지지해 줄 나라별 자조집단 육성으로 이어진다.
나라별 자조집단 육성을 통해 이주여성의 역량강화와 임파워먼트를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나. 모성보호활동

2001년부터 이주여성의 모성보호활동으로 70년대 독일에 이주노동자로 파견되었던 간호원
들이 주축이 된 모성보호팀이 가정방문하여 임/출산 이주여성의 건강관리와 산후돌보기, 신
생아 돌보기와 양육지원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찾아가는 서비스”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고, 여성가족부 용역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성보호가이드(2005년)도 제작
하였다. 또한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여한의사회>의 협조로 무료한방진료도 격월로 실시하고
있다.

(3) 이주여성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캠페인 활동

이주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핵심활동으로 삼고,
2003년 이후 정기적인 정책심포지엄과 정책연구를 통해 정부에 이주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이주민간단체의 활동가들과 대
표들이 모인 국제포럼을 2회 개최하는 등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이주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을 하고 국제간 네트워크도 조성하였다.

또한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정책 모니터링활동으로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의 베이징
+10 행동강령 이행 평가(2004)”,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2006)”, “참여정부의
이주여성정책평가와 과제(2007)” 등이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을 테마기획으로 시작하였다. 현재 수행기관은 총 26개 기관으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8개, 부산 5개, 경상도와 전라도 각각 4개 기관, 경기도 3개 기관, 충청도 2개 기관으로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17>.

<표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특성

특 성			빈도(N)	백분율(%)	비고
기 관 위 치	소재지	서울특별시	8	30.8	
		부산광역시	5	19.2	
		경상도	4	15.4	울산광역시(2), 함양군(1), 마산시(1)
		전라도	4	15.4	전주시(1), 목포시(1), 여주시(1), 광주광역시(1)
		경기도	3	11.5	시흥시(1), 고양시(2)
		충청도	2	7.7	옥천군(1), 대전광역시(1)
	지역특성	도시지역-일반	16	61.5	
		도시지역-공단	5	19.2	서울특별시(1), 울산광역시(2), 시흥시(1), 여주시(1)
		도시농촌복합지역	3	11.5	광주광역시(1), 마산시(1), 목포시(1)
		농촌지역	2	7.7	옥천군(1), 함양군(1)
기관유형		복지관	19	73.1	종합사회복지관(18), 노인장애인복지관(1)
		사회단체	6	23.1	이주외국인 지원단체(6)
		기타	1	3.8	보육원(1)
사업경험		유	11	42.3	복지관(5), 사회단체(6)
		무	15	57.6	복지관(6), 보육원(1)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일반’이 1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시지역-공단’ 5개, 도시농촌 복합지역 3개, 농촌지역 2개로 분포되어 대부분(81%, 21개 기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도시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복지관 19개(73.1%), 사회단체 6개(23.1%) 및 기타 1개(3.8%)로 구분되며, 이중 42.3%(11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 참여 이전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경험이 있으며, 사회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표 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행기관수 (%)	
여 성 결 혼 이 민 자	언어 교육	한국어교육	25	96.2%
		가정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	5	19.2%
		영어교육	4	15.4%
	생활 적응	정보화교육	11(1)	42.3%
		요리교육	18	69.2%
		취미교육	15	57.7%
		개인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18(1)	69.2%
		국적취득을 위한 지원/ 법률상담	9(1)	34.6%
		일상생활 능력 및 사회적응훈련	19	73.1%
		멘토링	9	34.6%
		자조모임/ 수다방/ 쉼터/ 소모임	12	46.2%
		문화교류 체험 및 어울림	18	69.2%
		상담원/ 교사 양성	5(1)	19.2%
	건강	건강서비스	12(2)	46.2%
	자립	자립을 위한 경제/취업 능력개발	7	26.9%
	자녀 양육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교육	14(1)	53.8%
		임신 및 출산 관련교육	9(2)	34.6%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가정방문	11(1)	42.3%
	기타	이주여성 인생설계	2(1)	7.7%
		이주여성 자원봉사활동	6(1)	23.1%
		국적취득을 위한 지원	3	11.5%
		이주여성 기타	2(1)	7.7%
배우자		배우자의 이주여성 언어 혹은 문화교육	11	42.3%
		이주여성 배우자 자조모임	9	34.6%
		배우자 기타	1	3.8%
부부		부부교육	14	53.8%
		부부상담	7(1)	26.9%
		부부 자조모임	6	23.1%
		부부 의사소통 훈련	8	30.8%
		부부캠프	11	42.3%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행기관수 (%)	
자녀	자녀 한국어 교육 및 학습지도	9(1)	34.6%
	자녀 특기/ 적성교육	2	7.7%
	자녀 통합교육	4(1)	15.4%
	자녀 리더쉽	1	3.8%
	자녀 문화교류 체험	9(1)	34.6%
	자녀 멘토링	1	3.8%
	미취학자녀 보호	15	57.7%
	자녀 상담	4	15.4%
	자녀 건강서비스	1	3.8%
	자녀 기타	4(1)	15.4%
시부모	시부모 교육	2	7.7%
	시부모 기타	1(1)	3.8%
가족	가족상담 및 치료	11(1)	42.3%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상담 및 치료	10	38.5%
	가족중심 멘토링	2	7.7%
	지속적 가족관계 개선	4	15.4%
	일회성 가족관계 개선	21	80.8%
	가족 기타	2	7.7%
지역 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2(1)	46.2%
	지역내 자원연계	15(1)	57.7%
	지역사회 인식개선	13	50.0%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사 양성	5	19.2%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	11(1)	42.3%
	지역사회 기타	1	3.8%
조사 연구 및 자료 개발	한국어교재 발간 및 번역	5(1)	19.2%
	한국생활 가이드 북 및 소식지	4(1)	15.4%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상담 및 사례자료집	0(1)	0.0%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5	19.2%
	다문화 양성평등가족 매뉴얼 제작 및 번역	0	0.0%
	조사연구 기타	3	11.5%
기타	이주노동자 남편과 한국인 아내 가족 지원	3	11.5%
	기타	5	19.2%

* 괄호의 수치는 자체 진행 사업 혹은 타기관 지원사업으로 %에 포함되지 않음.

<표 18>은 26개 수행기관에서 실시한 사업 현황으로 생활적응영역과 한국어교육에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교육, 요리, 취미, 일상생활능력 및 사회적응훈련, 문화교류 체험 및 어울림, 상담이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57.7%~96.2% 범위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교육, 부부교육, 미취학자녀보호, 일회성 가족관계개선, 지역내 자원연계, 지역사회내 인식개선 등도 과반수이상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족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장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문화상대주의에 기반한 다문화가족복지실천의 방향 수립에 기여하였다. 즉, 예방중심의 교육사업 정착,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사회문화적응력 향상과 화합, 실무자의 전문성과 사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4) 한국여성재단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여성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사회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된 이후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사회 조성사업과 여성복지사업을 자유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성평등 의식의 정책과 평등문화 확산사업, 여성인권증진사업, 여성운동 활성화 사업 등이, 여성복지사업으로는 빈곤여성가장, 여성장애인, 여성농민 등 소외계층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성매매 및 폭력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국여성재단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표 19>,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문화체험, 교육, 인권보호, 모자보호, 실태조사 등 다양하다.

이외에도 한국여성재단과 파트너 단체인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이 공동주관하고 삼성생명이 후원으로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NAL자>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여성의 모국에 방문함으로써 타문화권의 가족들 간의 이해를 돕고, 가정 내 친밀감을 독려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치를 알리고자 진행한 사업으로 총 규모는 2억원이다. 2007년에는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25명(7가족),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104명(26가족)에게, 2008

년에는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필리핀, 베트남, 몽골 출신 이주여성 가족 91명에게 왕복항공료와 다문화체험 및 가족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표 19> 한국여성재단 이주여성 지원사업

연도	지원 사업수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2002	1	기독교민회	이주여성노동자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2004	3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의료공제회	여성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노동, 아름다운 생활
		한국여성연합회 부설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여성주의 성교육 프로그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광주전남지역의 한국남성과 혼인한 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및 토론회
2005	2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이주여성노동자 모자보호
		한빛여성의 쉼터	이주여성이 함께 만든 평화의 섬제주 “우리도 제주 사람 이우다”
2006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이주여성 인권보호사업
2007	4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국제결혼 베트남의 딸들이 한국인 가족으로서의 정착을 위한 “한국의 모든 것 알리기”
		무안여성상담센터	외국인 여성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
		아산우리가족상담센터 부설 아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아산결혼이민자직업훈련 및 자아실현 프로그램 “나도 한국의 전문직 여성”
		씨알여성회	함께 이루는 가정, 함께 여는 미래
2008	1	안산이주민센터	이주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복지를 위한 공방사업

4. 외국의 다문화 정책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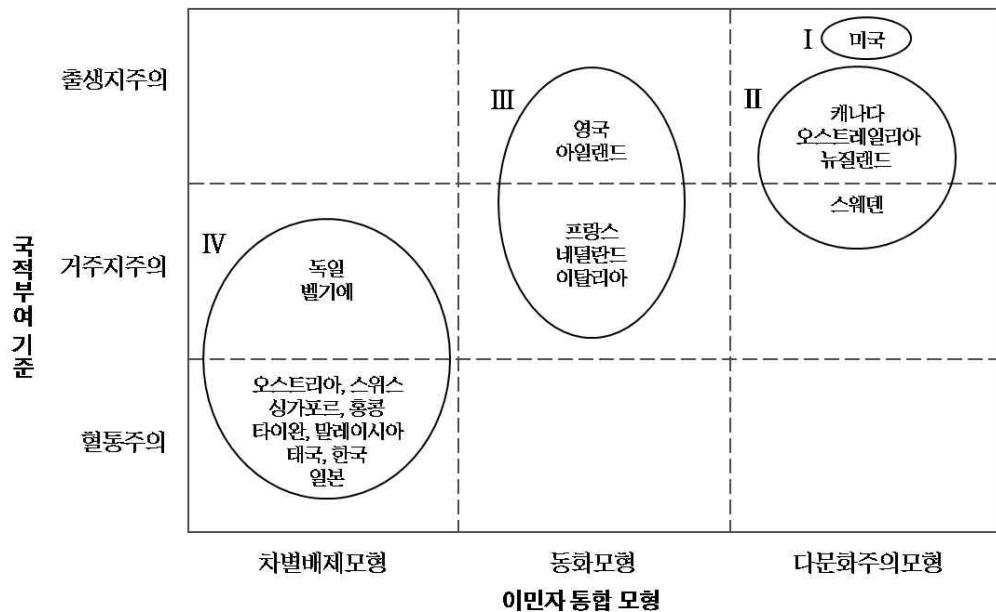
한국에 유입된 결혼이민자는 그 성격상 일본·대만 등 아시아 나라들과 유사한데, 신랑이 ‘맞선 여행’을 가서 결혼식을 올린 후, 현지와 자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는 달리 유럽·미국 등 국제결혼은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 반경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약혼자가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이주하거나, 유럽·미국에 귀화한 이민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배우자 또는 약혼자를 초청하는 형태, 즉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이주가 대부분이다.

1) 이민자통합 유형론

이민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크게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4>참조). 첫째,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형식이다. 1960년대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사용한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와 우리나라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도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별배제모형은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유형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일본·한국 등 단일민족사회의 신화를 간직한 나라는 물론이고, 프랑스·미국·캐나다 등 동화모형·다문화주의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생산기능직 노동자 등 특정 유형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차별배제모형을 적용한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이주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자국민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착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대만·일본 등에서도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착 및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민 수용을 철저히 배격해 온 차별배제모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6) 외국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통합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평택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7), 「다문화가족백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자료: Seol (2005: 81).

〈그림 4〉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유형

둘째,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동화모형은 유입국 사회가 자국 사회의 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치르는 조건으로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즉,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는, 주류 사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용광로(melting pot)에서 섞여져 결국은 그 출신국별 고유성을 잃고 단일한 성격의 국민으로 융해된다. 유입국 정부는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 자녀의 정규 학교 취학을 지원함으로써 동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동화는 이민자를 일방적으로 유입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정책이다. 이민자의 입장에서 동화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정서·태도 등을 획득하고, 그들의 경험과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생활 속으로 통합되는 해석과 융합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동화모형을 채택한 사회에서는 이민자의 문화·언어·생활습관을 보호하고, 또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차별 금지 등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1960년대까지 미국사회가 표방하였던 ‘용광로’ 모형, 프랑스 사회가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공화주의모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둔다. 1970년대 이후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미국 사회는 그 전까지 추구하였던 동화모형을 포기하고 다문화주의모형으로 이민자 통합 방식을 변경하였다. 다문화주의모형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집단과 그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습관들을 그대로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는 정책이다. 다문화주의모형은 타문화·타언어·이교도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 정책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주의모형은 흔히 ‘샐러드 그릇’(salad bowl)에 비유된다. 샐러드는 각기 다른 형태와 맛을 가진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모여, 공통의 드레싱에 의하여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인 것이다. 다문화사회를 ‘섞어놓은 샐러드(tossed salad)’, ‘종족적 모자이크’(ethnic mosaic), ‘무지개 연합’(rainbow coali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빔밥에 비유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모형은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나누는데, 이 두 개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제로 하는 조건과 실현 방법이 다르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원성·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화다원주의는 주류사회와 문화를 인정하고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사회 및 이민자를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미국은 문화다원주의를 사회통합의 원리로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자유방임주의적 접근’과 ‘국가개입주의적 접근’과 일치한다. 미국에서 국가는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이 고유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자유방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민족과 이민자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주의모형은 이념형(ideal type)으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의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정책 유형 중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두 가지를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이나 프랑스 등 동화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문화로 동화될 것을 요구하지만 이민자들이 해당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에는 개별 문화의 보존, 향유를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주민이 급증하고 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정책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주민에 대해 차별배제모형을 유지해오던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통일과 동구권 붕괴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와 IT분야를 중심으로 한 노동이민의 필요성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차별배제모형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차별배제 모형 국가의 정책적 변화

(1)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면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은 기존의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공생관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면서 이 문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표 20>.

일본은 중앙정부가 주요정책의 제안,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실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해 외국인을 국제교류원으로 채용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의 문화나 사회구조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민관이나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일본어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또는 지역 내 정보를 수집해 이주민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 일본어 교육과 함께 각종 언어로 상담 가능한 외국인전용 창구까지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통해 핵심 사업에 대한 모델이 발굴, 제시됨으로써 더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표 20> 일본 다문화공생 플랜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다문화 공생의 의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민의 수용주체로서의 지역 ▷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장 ▷ 지역의 활성화 ▷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향상 ▷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 조성
기본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케이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 다양한 언어,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 정보 제공 - 외국인 주민 상담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 NPO와의 제휴, 지역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 -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관련제도, 교육제도, 노동제도,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방재에 대한 정보제공 -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 설치 - 지역 내 횡적 제휴 - 시군구, 읍면동과 현의 역할분담 및 협력

출처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2006). 247-248쪽 재정리

대표적인 예로 가나가와현에서는 ‘가나가와 힘 구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현민과 함께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히로시마현에서는 ‘히로시마 국제시책 플랜 2010’하에서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즈오카현에서

는 ‘다문화공생의 지역만들기 현민운동’을 전개하고 미에현에서는 ‘공생사회추진모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도 가와사키시가 ‘가와사키시 다문화공생사회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히로시마시는 1999년 11월에 제4차 히로시마시 기본계획에서 ‘외국인이 살기 쉬운 마을 만들기’와 ‘다문화 공생 의식의 고양’을 시정 목표로 삼아 추진하던 것을 한층 발전시켜 2006년 4월 ‘히로시마시 다문화공생의 도시만들기 추진지침’을 확정, 추진하는 등 다문화공생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1950년대부터 줄곧 차별배제 모형을 유지하여 왔는데, 당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수 입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독일에 체류하는 정책은 노동력 관리 차원으로 한정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귀환은 정부의 관리를 벗어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주노동자가 2천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의 증가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는 정책과 함께 이미 실질적으로 독일 사회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추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 동구권의 붕괴로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급증하자 독일 사회 내부의 갈등과 긴장은 심각하게 되었고, IT 등 신규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주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독일 정부는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의 정책의 일대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속 지주의적 국적 개념을 일부 도입해 이주민들의 국적 취득권을 확대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관련 법을 제· 개정하여 사실상 정착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을 독일사회에 통합하려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설동훈 외, 2004:10, 12-15).

2005년 새로운 이민법(Zuwanderungsgesetz, 2005년 1월 개정)을 도입하면서 독일 정부는 외국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로 독일연방 이주/난민 사무소와 외국인국을 지정하는 한편, 이주자들이 독일의 경제· 문화· 사회 영역에 원활히 통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코스(Integrationskurs, IK)를 마련하였다. 2005년 약 105,000명의 이민자들이 7,500회의 사회통합코스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참여한 이민자 중 10,000명이 초급 독일어 자격증(Zertifikat Deutsch)시험에 응시하여 2/3가 합격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코스를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통합코스는 언어교육과 함께 독일의 법률 체계, 문화, 역사를 소개하는 과정으로 구성

되는데, 강의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인적 구성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되며 연령별, 성별 강의나 독일어 구사 능력에 따라 수강자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독일 정부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이주민들이 사회통합코스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사회통합코스에 참여한 기록을 이주자의 체류연장과 같은 행정업무에 반영하고 새 이민법에 교육과정의 수립과 진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3)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

(1) 호주

1960년대 중반까지 호주정부는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민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에도 자국의 문화와 인종적 동질성을 보존하는 백호주의정책(White Australia Policy)을 유지해왔으나 유럽 이외 지역의 인적자원을 도입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호주에서는 1973년 이민자 노동부 장관인 얼 그래스비(Al Grassby)가 '미래를 위한 다문화사회(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Future)'라는 문서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1978년 '갈버리 보고서(The Galbally Report)'에서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 정책 하에서 호주 정부는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이주민 집단에 대한 재정적 보조 등의 지원사업을 전개하였고 1982년에는 정책의 성격을 비영어권 이주민 집단을 위한 지원에서 호주 사회 내부의 문화적 소수자들까지 확장해 나갔다(이용승, 2003: 34-36). 특히, 1989년부터는 '다문화적 호주를 위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 for a Multicultural Australia)'를 시작으로 '다문화적 호주를 위한 새로운 의제(New Agenda for a Multicultural Australia)'(1999년), '다문화적 호주: 다양성 속의 통합(Multicultural Australia: United in Diversity)'(2003년) 등 일련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 다문화주의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가 70년 이상 넘게 국가 이민정책으로 유지한 백호주의 정책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다문화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관해 호주인들 모두가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문화주의 정책에 의해 이민자들의 복지뿐 아니라 호주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향상과 화합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설득력 있게 작용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호주 연방정부 기관인 DIMIA(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Aboriginal Affairs)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인구의 23%는 외국에서 태어났고 20%는 양친 중 한명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또 호주 내에는 약 200여개의 언어가 공존한다.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문화 정책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은 첫째, 시민적 의무(responsibility of all), 둘째, 상호존중(respect for each person), 셋째, 상호 공평성(fairness for each person), 넷째, 공동 이익추구(benefits for all)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전략은 첫째, 조화롭게 살기(living in harmony), 둘째, 더 공평한 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fair government services and programs), 셋째, 다양한 업무(diversity works), 넷째, 회교사회와의 공존(Muslim Community Reference Group), 다섯째, 회교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국가행동계획(The National Action Plan)의 수립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회교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회교지도자들과 호주 내에서 더불어 사는 방안에 대한 각종 회의와 실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3천만 인구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문화, 인종,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캐나다의 탄생부터 있어온 근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캐나다인 6명 당 1명이 이민자이거나 이민으로 형성된 소수민족 집단에 속해 있다. 유럽인들이 캐나다에 정착할 당시 캐나다에는 56개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¹⁷⁾ 원주민들이 30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정착 초기에는 유럽 중심의 이민자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이민자 출신지가 다양화되고 이와 동시에 퀘벡주의 프랑스-캐나다인 민족주의 운동이 발전하면서 이중문화, 이중언어 공존 요구가 분출하자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었다.

1971년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 문화의 표현을 장려”하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Canadian Multiculturalism Policy)이 선포되면서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국가가 되었다. 당시 다문화주의는 원주민과 이민자를 포함해

17) 캐나다 정부는 과거 인디언으로 불리던 원주민들을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인디언이라는 용어가 백인중심의 차별적 용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인종과 종족, 언어,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캐나다 시민의 가치와 존엄을 강조하고 이와 동시에 영어와 불어 두 언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선언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1982년에는 다문화적 원칙이 캐나다 자유·인권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에도 수용되어 “모든 개인은 법 안에 평등하며 피부색, 인종, 국적, 종족, 종교의 차별을 받지 않고, 보호와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헌장 15조)”는 점을 명시하고 “캐나다의 다문화적 전통을 꾸준히 보존하고 향상 시킬 것(헌장 27조)”을 천명하였다(Department of the Secretary of State of Canada 1987). 이에 더해 1988년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공포하면서 다문화주의 정책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였다. 여기에는 인종과 종족, 종교와 언어와 관계없는 ‘포괄적인 시민권(inclusive citizenship)’을 말하며, 실제 영어와 불어 모두가 캐나다의 공식 언어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그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주관기관은 Canadian Heritage이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지방에는 5개의 사무실과 23개의 서비스센터를 두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NGO, 지역 소수인종 공동체, 종교단체, 학교, 국제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일방적 동화가 아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이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언어교육프로그램, 이민자 정착과 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의 가정을 연결하여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는 ‘The Host Program’ 등이 있다.

5. 소결

3장에서는 국·내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고찰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하여,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그 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로 중앙의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

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한국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결혼이민자 모국의 문화, 언어, 풍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쌍방향적인 이해가 아닌, 일방적인 융화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아직도 우리사회 일반인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도 관련되어 있다. 각 부처의 지원도 획일적이고, 상위하달식이라 지역의 특색, 수요자인 다문화가정의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각 부처 간의 적절한 조율과 공조가 미흡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 각 부처의 서비스가 집중되거나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책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그 동안의 지원정책은 주로 언어, 사회문화적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 인력 활용 정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들의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한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양육 상담, 사회·문화적응 사업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도 실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북은 농촌문화 적응교육으로 생활농업기술과 여성농업인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경북은 여성결혼이민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운영하고, 인천광역시도 가족화합 프로그램 및 종합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다. 특히 충남의 경우 다문화 유관기관·부서 T/F팀 구성은 타 시도와는 차별되는 정책으로 통합적 지원사업을 위한 조치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과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은 충남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지역별 특화 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면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특성화된 정책보다 대부분 대동소이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정책도 주로 언어 및 생활적응에 중점으로 두고, 이들의 입장에서 경험과 어려움보다는 기존의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정보의 부족, 가족의 반대, 교통 불편 등으로 일부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중복으로 지원되거나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많다.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들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체 특화사업의 경우도 인건비의 추가 지원없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전국 8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공통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생활상담사업,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생활교육, 정보화교육, 취업교육, 자조집단 운영 등과 특화사업으로 문화·정서지원사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자녀지원사업,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다수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된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인력부족, 지역사회와의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이민유입국 사회의 이민자통합정책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민 수용을 철저히 배격해 온 차별배제모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다문화공생플랜을 수립하면서 외국인을 공생관계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도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난민의 증가로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동화모형은 이민자들이 점착-경쟁-화해-동화의 순으로 유입국 사회의 성원으로 합류한다는 입장으로 1960년대까지 미국사회가 표방했던 용광로(melting pot) 이론이 대표적인데 이후 미국도 다문화주의로 전환하였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다문화주의모형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언어, 습관을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는 정책으로 각 인종과 민족은 서로의 이익추구와 협조를 통한 조화를 이루면서 다문화사회를 형성한다고 보는 샐러드 보울론과 완전한 혼합과 융합을 의미하는 비빔밥 문화론이 있다.

외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문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적응, 융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생, 공존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언어 문화적 적응 외에도 인권, 사회적 지위, 결혼이민자 2세를 위한 지원, 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등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저출산·고령시대의 중요한 생산 인력이며 국제

화 시대의 중요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소중한 국민의 일원으로써 지속적인 정책적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복지 및 인권보장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으며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주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및 정책적 방안 조사결과

1. 조사개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직접 방문, 담당자 인터뷰,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우수사례 수집, 다문화가족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이다. 우편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65개소의 총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9월-10월 중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송부하고 전화로 확인과 협조 요청 과정에서 파악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준비 중인 기관과 개소 초기라 아직 준비가 부족한 기관 28개소를 제외하고 117개 기관 중 30부(회수율 25.6%)와 개인적 부탁으로 수집된 2부를 포함하여 총 32개 기관이 최종 분석되었다. 이는 분석을 일반화하기에는 적은 수이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현황과 지역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한 내용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수사례는 10개 기관에 대한 설립목적 및 연혁, 주요사업내용, 지역사회활동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및 팀장 3명, 연구기관 연구원 1명과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학계 교수 3명과의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우편조사 결과

1) 조사대상기관의 일반적 현황

조사대상기관은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21.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법인 21.9%, 사단법인, 시민단체, 종교법인 등 각각 12.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사업 시작년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2006년이 40.6%로 가장 많았고, 2005년 이전 25.0%, 2007년 15.6%, 2008년 18.8%이다<표 21>.

조사대상기관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 운영비의 대부분(83.4%)을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비는 연평균 102백만원이다. 담당직원은 평균 5.0명으로 상당수가 사회복지사(93.8%), 상담사(53.1%), 교사자격증(34.4%)을 소지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수는 월평균 19.0명이다. 조사대상기관에 등록된 결혼이민자수는 평균 205.7명,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0.8명이며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평균 11.8%, 평균 연령은 26.4세(22-44세)로 나타났다.

<표 21> 조사대상기관 특성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사업시작년도	2005년 이전	25.0(8)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9.4(3)
	2006년	40.6(13)		지자체	31.2(10)
	2007년	15.6(5)		학교법인	21.9(7)
	2008년	18.8(6)		사단법인	12.5(4)
				시민단체	12.5(4)
				종교법인 등	12.5(4)

<표 22> 조사대상기관의 주요 현황

변수	N	평균(표준편차)	범위(최소-최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규모	19	102백만원(102.7)	2-380백만원
정부지원비율	23	83.4%(21.8)	22-100%
담당직원	31	5.0명(8.0)	1-37명
자원봉사자수(월평균)	28	19.0명(21.9)	2-100명
등록 결혼이민자수	26	205.7명(132.0)	20-500명

2) 결혼이민자가족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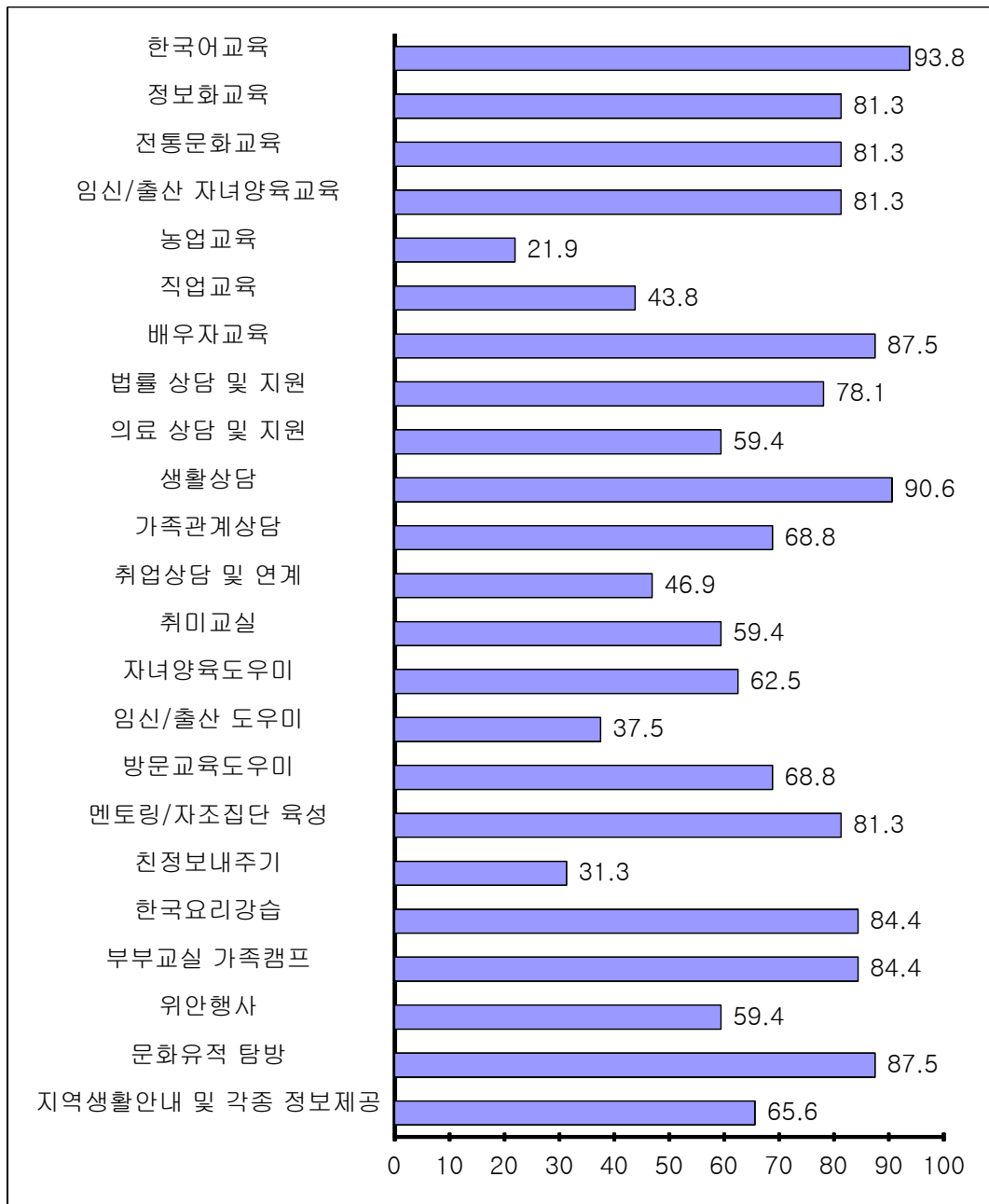
조사대상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결혼이민자가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시 비율이 높은 사업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통사업으로 수행되는 것들이다<그림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 실시가 9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상담 90.6%, 문화유적 탐방과 배우자교육 87.5%, 부부교실/가족캠프와 한국요리 강습 84.4%, 임신/출산/자녀양육 교육과 멘토링/자조집단 육성 8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잘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을 89.7%로 높게 지적하고 방문교육도 우미 31.0%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에서 실시하기 가장 어려운 사업으로는 배우자교육 24.1%, 친정보내주기 13.8%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기관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는 역시 한국어교육이 6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교육 25.8%, 임신/출산/자녀양육 교육 19.4% 순으로 나타났다.

3) 타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현황

조사대상기관의 지역사회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75.0%이며, 정기모임은 월 평균 3.6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계와 협력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공동(연합)사업 기획(62.5%), 정보공유(58.3%), 지원사업관련 문제시 공동 대응(45.8%)이었고, 결혼이민자 가족서비스 역할 분담(25.0%) 및 지역 결혼이민자가족 조사실시(16.7%)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은 조사대상기관이 각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연계/협력 정도를 1점 '없음'에서 4점 '높음'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연계/협력이 가장 높은 기관은 행정기관(3.6)이며, 다음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3.5), 병원/보건(지)소(3.3), 지역사회복지기관/시설(3.1), 학교(3.1), 건강가정지원센터(3.0), 여성단체(3.0)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협력 방식은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과의 정보교환이 높은 편이다. 차이점을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시설과는 서비스의 지원제공이 많은 반면 병원/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평생학습관), 문화원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많았다. 한편 행정기관, 학교, 여성단체와는 행사 및 사업을 공동주최하는 형식이 많고 상담소와는 클라이언트 의뢰가 많았다.



〈그림 5〉 결혼이민자가족사업 실시현황

〈표 23〉 결혼이민자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정도

연계/협력 기관	N	평균(표준편차)	범위(최소-최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6	3.5(0.6)	2-4
건강가정지원센터	21	3.0(6.3)	1-4
이주여성인권센터	20	2.2(1.0)	1-4
행정기관(시/군, 읍/면/동)	27	3.6(0.8)	2-4
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	25	3.2(0.8)	2-4
교육청	24	2.6(1.2)	1-4
학교	22	3.1(1.2)	1-4
병원/보건(지)소	26	3.3(1.1)	1-4
종교/민간단체	23	2.7(1.1)	1-4
여성단체	23	3.0(1.2)	1-4
상담소(법률, 성폭력)	26	2.9(1.1)	1-4
농업기술센터	22	2.5(1.4)	1-4
도서관(평생학습관)	21	2.4(1.1)	1-4
문화원	22	2.3(1.2)	1-4

연계/협력정도 : ①없음, ②낮음, ③보통, ④높음

연계/협력활동에서 결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계활동 외 업무량 과다(62.1%)가 기관 차원에서는 예산 및 인적 자원 부족(41.9%)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연계사업으로는 <표 24>,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정보교환(70.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정보 프로그램 개발 54.8%, 서비스 대상자 의뢰/관리와 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자원 관리 각각 51.6%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계활동에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표 25>, 각 조직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 공유와 활발한 정보교환(77.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기적 협의모임(사업계획,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74.1%, 정보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업무의 표준화 38.7%,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안내 활동의 공동 실시 3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필요한 지역사회연계사업 (복수응답)

사업	%(N)
서비스대상자 의뢰 · 관리	51.6(16)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정보교환	70.9(22)
사업 공동 계획 및 실시	35.4(11)
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 자원 관리	51.6(16)
지역사회 통합 정보 프로그램 개발	54.8(17)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22.5(7)
직원 교육 및 연수	9.6(3)

〈표 25〉 연계활동에서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방법(복수응답)

방법	%(N)
담당 실무자에게 연계활동의 실질적 통제력과 권한 부여	19.3(6)
각 조직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 공유와 활발한 정보교환	77.4(24)
정기적 협의모임(사업계획,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74.1(23)
정보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업무의 표준화	38.7(12)
문제 및 욕구에 대한 공동조사 및 사업평사 활동의 실시	22.5(7)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안내 활동의 공동 실시	38.7(12)
타 조직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조직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	25.8(8)

4) 결혼이민자가족사업 지원방안

결혼이민자가족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분야에서의 충분정도로 측정하였는데,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충분 정도는 1점 ‘매우 부족’, 5점 ‘매우 충분’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시/군의 협조 및 지원이 3.5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상자확보(3.2),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조(3.0)만이 보통 이상이고 나머지 분야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담당인력(1.4), 재정(2.2), 시설 및 기자재(2.2)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표 26〉 결혼이민자가족사업 평가(충분정도)

분야	평균(표준편차)	범위(최저-최대)
담당인력	1.4(0.6)	1-3
재정	2.2(0.9)	1-4
전문 강사 확보	2.4(1.0)	1-4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조	3.0(0.9)	1-5
대상자 확보	3.2(0.9)	1-4
자원봉사자 확보	3.0(1.1)	1-5
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	2.9(0.9)	1-4
시/군의 협조 및 지원	3.5(1.0)	2-5
시설 및 기자재(공간,차량)	2.2(0.9)	1-4

〈표 2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의 자체역량강화

자체역량강화사항	평균 순위	중요도 순위
재정 확보	2.5	1
직원 교육 및 연수의 정례화	4.4	3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3	2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4.7	5
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 자원 관리	5.1	6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5.7	7
시설 및 기자재 확보(활용공간, 차량)	4.4	3
지역주민 대상의 사업인지 교육 및 홍보	5.8	8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자체 역량강화로 요구되는 중요 순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 27>, 재정확보가 최우선으로 중요하고,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직원교육 및 연수의 정례화와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이민자가족사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중요 순위로는 재정지원이 1순위이며, 2순위 전문인력의 지원/파견, 3순위 시설 및 기자재의 보급, 4순위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순으로 나타났다<표 28>.

결혼이민자가족사업 지원방안에서 살펴본 현 사업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사항, 정책적 지원방안 3가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통적으로 재정, 인력,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

체 노력 및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공유 DB구축,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결혼이민자가족의 정책적 지원사항

정책적 지원 사항	평균 순위	중요도 순위
재정지원	2.3	1
전문 인력의 지원 혹은 파견	3.1	2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4.1	4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 활동 공동실시	5.4	7
서비스 담당자 교육 및 연수 체계 정립	4.7	6
시설 및 기자재의 보급(활용공간, 차량)	4.0	3
지속적 관리체계와 정보 공유를 위한 DB구축	4.4	5

마지막으로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수행 시 문제점이나 개선책, 정부 정책의 건의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 부처 간의 중복된 지원, 실적 위주의 사업, 인력부족, 지나친 업무량, 지역차이 고려하지 않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선책과 건의사항도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부처 간 통합된 정책, 인력 및 재정 확충,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 지역 네트워크 구성, 중복지원 지양,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상담통역자 지원,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필요 등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전문가회의 결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상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의견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우편설문조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는 재정, 인력, 시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센터 업무의 행정적인 애로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제도권에 들어가 지원을 받

으면서 일정한 관리와 실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도 실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과 말을 가르치기보다는 정해진 교재에 맞게 어느 정도 진도를 맞추는지 등 일지 기록이 더 중요시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양적인 실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문제를 진실되게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실 방문도우미교육에서는 한글교육뿐 아니라 상담, 문화이해 등의 정서적 측면도 함께 살피면서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 상담, 문화이해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에서 주제가 시어머니라면 교육에서 한국가족의 풍습, 인사법 등 문화적인 이해 교육 뿐 아니라 이런 교육과정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한 상담도 곁들이게 되어야 올바른 지원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외부사업 유치, 지원금의 지출여부 등 외적, 양적 기준에 중점을 두는 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행되는 사업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정책들은 지역의 현실과 특색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지역내에서 각기 다른 부처의 지원 아래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이 실시되는 중복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지역 내 실시기관 사이에서 경쟁의식을 유발하여 지원사업의 실적에만 집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연계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이 외 민간단체, 여성단체, 복지재단들도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역 내 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 실무자들은 각 지역, 각 센터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재량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결혼이민자가족의 실질적인 욕구와 현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경작할 땅이 없는데 무조건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의 기본적인 현황과 욕구에 기반한 지원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담 인력의 절대 부족 외에도 방문서비스나 영농과 관련된 인력은 1년에 10개월만 지원되므로 실제로 직원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재정 지원도 전반적으로 부족하지만 실제로는 지원되는 예산이 항목별로 고정되어 있어 실제 집행시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점이 어렵다고 한다. 즉, 교육비 명목이면 강사들이 가정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교통비로 전환할 수 없는 등 너무 획일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센터의 재정, 인력에 대한 확충 뿐 아니라 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회계 교육, 조직/인적 관리 교육,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확대되면서 중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되고 각 지역 센터들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한 수준이다. 또한 지역의 센터 현황과 문제점, 욕구 등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 중앙 센터의 의결, 심의 위원회 등에 지역 센터장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¹⁸⁾는 인권침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은 후 거주증을 발부하게 되면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한국어 등 정착 및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초기에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업교육이나 한국어교육 등 참여시 동반한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간이 보육시설 설치, 학령기 아동양육/교육 지원도 5개월마다 대상자를 바꾸어야 하는 점(실제로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함), 농촌지역은 광범위하다보니 방문교육을 필요한 곳곳에 실시하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센터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역자원과의 연계이다.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8년 11월 45일에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주최의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전국대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협의체 형식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의 구성은 각 시·도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며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고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네트워크는 관련기관과의 조그만 연계와 협조를 토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첫 출발로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지역내 관련기관, 즉, 보건소, 교육청, 여성

1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을 지원하고, 국민과 이민자간 상호존중 및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문화이해 및 이민자 지원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귀화 희망 외국인 및 국민(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09. 1월부터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단체 등을 포함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각 센터마다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지역내 다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의 중복, 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 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5개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재 1거점(서울/인천/경기/제주), 2거점(대전/충청권/강원), 3거점(경북/대구), 4거점(울산/부산/경남), 5거점(광주/전북/전남)으로 나뉘는데, 1개 거점에 포함된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1거점의 서울, 인천, 경기도에 제주를 포함한 점과 2거점의 대전, 충청권, 강원까지 묶은 점은 지나치게 인위적이므로 이에 대한 세분화된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반면에 거점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실제로 거점센터는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점 역할을 하는 기존의 센터에 1명의 추가 인건비와 약 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수준이라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한정적인 면도 있다. 이와 관련되어 거점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비 대신에 중앙에 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역별 필요한 교육, 관리를 각 지역으로 파견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디어

농촌에서는 가가호호 방문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일부 센터에서는 먼단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실무자들은 각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을 역할 분담하여 배우자교육, 가족통합교육 등은 센터에서 직접 담당하고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은 접근성이 높은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때 교육교재, 강사교육 등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옥천군의 경우 자활공동체를 조직하여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이들의 영농작물(매실)을 제품(매실된장, 매실청 등)으로 상품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여성이 폴리머클레이¹⁹⁾ 교육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

19)폴리머클레이(polymer clay)란 고분자 진흙(PVC)을 사용한 공예품으로 쉽게 모양과 색을 넣어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재료와 달리 변형, 변색이 없는 특징이 있다.

다. 일정 기간 동안의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요즘 결혼이민자여성의 인력 활용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느 정도 한국어 능력이 있고 잘 적응한 결혼이민자 여성 인력을 한국어 보조 교사, 원어민 강사, 자조모임 리더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자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와 이해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결혼이민여성의 인력활용이 절실한 곳은 보건소, 병원, 상담, 경찰서, 법원 등 일상생활 관련 부분에서의 통역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대규모 행사에서 사용되는 만국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포함되면서도 정작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인 동남아 국기는 없다는 점도 작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에서 국가, 문화, 세대갈등 등이 실제로 표면화되고 문제시 되는 시기가 중요하므로 입국 후 2개월 정도 시점에 가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4) 앞으로의 과제

그 동안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및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 실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들의 자녀교육 문제, 가정폭력신고 전화(1366) 운영, 쉼터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도 정책적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는 국제화시대에 우리나라의 민간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어머니 나라에 대한 교육을 통한 자존감 및 문화 정체성 확립과 저학년기의 교육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학까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지어서는 국가 정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와도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상업적 목적인 결혼정보업체를 도와주는 일 아니냐는 반대 입장도 있지만 결혼이민여성과 배우자와의 상호 이해와 적응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협조로 예비 배우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가족의 남편, 시부모의 며느리 나라 이해 교육도 중요한데 결혼 전 예비교육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이라 결혼정보업체의 협조를 통하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범위를 국제결혼 여성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러 가지로 운영상 어려운 여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지원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4. 소결

4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우편조사와 다문화가족관련 전문가 회의와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지역사회내 연계 및 협력 현황,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동사업으로 정해진 한국어교육, 생활상담, 배우자교육, 한국요리 강습 등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한국어교육은 가장 잘 실시될 뿐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교육은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기관에서 결혼이민자가족사업 수행시 문제점으로는 재정, 인력, 시설 및 기자재 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체 노력 및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공유 DB구축,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 간의 중복된 지원, 실적 위주 평가, 인력부족, 지나친 업무량, 지역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지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개선책으로는 부처 간 통합된 정책, 인력 및 재정 확충,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 지역 네트워크 구성, 중복지원 지양,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상담통역자 지원,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필요 등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요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는 것은 지역자원과의 연계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윈-윈(win-win)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확대되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지원하는 거점센터에 대한 확충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현재의 정착과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도 이들의 자녀교육 문제, 가정폭력신고 전화(1366) 운영, 쉼터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각이 동화가 아닌 공생, 공존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2000년대 이후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면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다문화가족정책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앞에서 정리한 중앙정부의 부처별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민간단체에서의 지원사업의 고찰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실무자의 우편조사, 전문가 회의, 우수사례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다문화에 대한 시각의 전환: 통합에서 상호공존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정 정책의 기본 입장은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하여 통합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들의 급증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탈북자가족, 외국유학생 등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사회도 점차 다문화주의 모형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요구되고 있다. 즉, 다양한 민족, 문화, 언어, 습관을 각기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며 상호 공존하는 공생의 존재로 인식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 제도, 사회적 지원정책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 다문화 관련법의 개선

다문화 관련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동화 및 통합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탈북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도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주체적 가치 인정 및 인권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9년에 추진하려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규정 신설 외에도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교육 시간의 확대, 불법행위의 처벌 강화 등도 국제결혼 피해 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교류센터 설립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교육적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한다. 다문화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족, 인종의 사회문화적 소개, 풍물 전시 등에 관한 교육 현장으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일방적이지 않은 쌍방향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여 다문화를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센터를 구심축으로 다문화가정의 각종 행사 및 자기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강좌개설, 다문화관련 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 촉구 및 인력활용

다문화가정은 남과 다르다는 혹은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일부 사회적 시선을 인식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게는 마을 반상회 참여, 학부모 모임 등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주체적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며, 크게는 거주 외국인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정책에 자문 및 참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능력개발, 자신감 및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여성 중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리더를 발굴하여 리더 교육을 통해 학교보조교사, 자녀교육 교사, 관공서, 상담, 의료기관 등에서의 통역, 자조모임의 리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체계적, 통합적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추진

1)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수립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현재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정지원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단기간,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국가 차원의 정책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복지 및 인권보장에 적극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다문화복지사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런 특화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접목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 - 민간, 민간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확립

효율적인 다문화가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 파악된 다문화가정의 기초 현황 등의 자료를 개인적 사생활이 보장되는 한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 민간, 민간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요즈음 논의가 활발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도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업 및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와 사업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여 유사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체 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간의 긴밀한 협의·조정 of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및 불필요한

재정적인 유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센터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네트워크 구축, 정보 및 프로그램 교류, 교육 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차별화된,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수립

1)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추진

다양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의 발굴뿐만 아니라 개선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방식 적응의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수용·고려하여 마련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발·시행을 통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적 인식과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특색을 고려한 프로그램, 자활/자립 지원 프로그램(직업 및 영농교육)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본격화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의 각 시기별 필요한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특화하는 정책으로 전 시기에 걸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며 확대하려는 방안은 그 동안에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과 제언으로부터 나온 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 전 단계에서 철저한 예비교육은 정착 초기의 다양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의 협조 등을 유도하여 결혼이민가족을 파악하고 남편 및 다른 가족의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자 국가에 대한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등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3) 다양한 지원사업의 개발 및 보급

지금까지 다문화 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이 강조되다가 이후 ‘찾아가는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자조모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의 초점이 이동되면서 앞으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지원사업 영역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언어 문화적 적응 외에도 인권, 사회적 지위, 결혼이민자 2세를 위한 지원 등이 주목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저출산·고령시대의 중요한 생산 인력이며 국제화 시대의 중요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특히 결혼이민자 2세의 교육 및 지원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다문화 지원정책도 현재의 결혼이민자가족 중심에서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 자원 활용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센터들의 인력,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각종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공공기관과 민간에 구축된 자원봉사자 관리 인프라의 사용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의 교육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의사, 간호사 및 의료직 전문가, 조리사, 이·미용사 등의 다양한 전문 인력은 훌륭한 인적 자원들으로써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 교육관련 사업들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통하여 상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어 온 다문화가정 교육서비스는 ‘맞춤식 한국어 방문교육’처럼 방문사업으로 실시되는 것도 있으나 이외의 각종 다양한 교육들이 복지기관 등에서 집합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들은 재정이 허락된 일정기간 동안 실시되다가 중도에 끊기는 경우도 있고, 소정의 기간을 훈련받은 교육원들에 의해 교육되어지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비전문적, 간헐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지역 내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연계·활용하여 전문인을 통한 상시적, 중·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모델일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불편

한 교통편, 장거리 이동 등이 교육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접근성이 높은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하고 교육교재, 강사교육 등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제6장 결 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 국내 체류 외국인인 110만 명이며, 이 중 결혼이민자는 11만 명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은 2007년 38,491건으로 전체 결혼의 11.1%이며,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가족은 이 중 76.1%로 다문화가정은 우리사회의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최근 동향을 포함한 통계 현황, 법, 다문화가정의 현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 외국의 다문화정책 등을 문헌연구 및 정부자료, 통계 현황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실무자 대상 우편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우수사례 수집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다문화에 대한 기본 시각을 통합에서 상호공존으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1)다문화 관련법의 개선, 2)다문화교류센터 설립, 3)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 촉구 및 인력활용을 제안하고, 둘째 체계적, 통합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추진 방향에서 1)국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수립, 2)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 3)국가-민간, 민간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확립을 제안하고, 셋째 차별화된,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수립 방향에서 1)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추진, 2)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본격화, 3)다양한 지원사업의 개발 및 보급, 4)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이

혼재되어 있지만 큰 방향을 향한 정책제언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들은 일부 이미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시범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시행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들을 조율하고 재조정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이며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각 지역의 특색과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정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 내용과 개선방안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2007). 2007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경상북도.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 김경신(2006).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학회 & 한국가족치료학회, 82-110.
- 김경신(2006). “결혼이민자가족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21-42.
- 김범수 외(2007).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상일(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3주년 기념심포지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김영주(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이선 외(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 김영주, 정해숙(2008). 농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김정옥, 전현미, 이형혜(1990). 아내학대와 관련된 변인파악 및 아내학대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여성문제연구 18.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 사회 70.
- 박대식(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재규 외(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박종보, 조용만(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법무부(2007). 2006년 출입국 관리통계연보, <http://www.moj.go.kr>.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1-20.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설동훈 외(2006).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실태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맞선여행에 관한 현지연구, 보건복지부.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 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자료집.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양순미, 유영주(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 이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75-91.

양순미,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윤형숙(2004). “국제결혼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윤형숙(2004). “외국인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이순형(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방안, 농림부.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이윤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장은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전수현(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정기선 외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일선 (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2007).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다문화 청소년이해론, 양서원.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07 사업운영결과보고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채옥희 외(2005). “국제결혼가족의 가정생활 적응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45-103.

최금혜(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08년 결혼이민자 현황, <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청(2007). 2006년 혼인통계결과, <http://www.nso.go.kr>

평택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7).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한건수(2006). “다민족·다문화사회의 도래와 한국사회 ;국제결혼의 증가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실무자양성 워크숍.

한건수(2006).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사회이행과 사회문화적 통합의 과제와 현실“, 한국가족상담학회 & 한국가족치료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7). 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현황과 과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재단, www.womenfund.or.kr

【 부 록 1 】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진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기획과제로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운영상의 애로점, 지원욕구 및 의견 등을 파악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 이러한 조사취지에 가장 적합한 담당자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당면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진

모선희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인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선행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성운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2008년 9월

지 역	도	시 · 군
기관명		

I. 기관의 현황

□ 기본 사항

1. 설립년도 _____ 년
2. 운영주체 _____
3.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시작 년도 _____ 년
4. 년 지출총액(2007년도) _____ 백만원
5. 기관 운영비 비율
정부지원금____% 자부담____% 수익사업금____%
프로그램 공모 지원금____% 후원금____%
6. 총 예산 중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비 비율
_____ % _____ 백만원
7. 건물 현황 (시설규모/총 건물연면적) _____ 평

□ 인력 현황

8. 직원현황
총원 _____ 명 (정규직 _____ 명, 비정규직(계약직) _____ 명)
 9.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담당 직원
총원 _____ 명 (정규직 _____ 명, 비정규직(계약직) _____ 명)
 10.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담당 직원의 자격증
자격증 소지율 _____ % _____ 명
 11.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직원의 소지 자격증은?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사회복지사 ②간호(조무)사 ③정신보건전문요원
④상담사 ⑤교사자격증 ⑥기타 _____
 1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자 수: 월평균 _____ 명
 13. 자원봉사자의 소지 자격증은?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사회복지사 ②간호(조무)사 ③정신보건전문요원
④상담사 ⑤교사자격증 ⑥기타 _____
 14.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1인당 평균 월 _____ 회 1회 평균 _____ 시간
 15. 자원봉사자의 주요 활동 내용:
-

II. 결혼이민자가족사업 현황

1. 이용자 수: 등록 인원 _____ 명 1일 평균 이용인원 _____ 명

2. 결혼이민자 특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_____ %

연령 범위: _____ 세(ex. 20- 55세) 평균 연령 _____ 세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사업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한국어 교육 ②정보화교육 ③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다도 등)
 ④임신/출산, 자녀양육 교육 ⑤농업(기술)교육 ⑥직업교육
 ⑦배우자교육 ⑧법률 상담 및 지원 ⑨의료 상담 및 지원
 ⑩생활상담 ⑪(학대, 가정폭력 등) 가족관계상담 ⑫취업상담 및 연계
 ⑬취미교실 ⑭자녀양육도우미 ⑮임신/출산 도우미
 ⑯방문교육도우미 ⑰멘토링/자조집단 육성 ⑱친정보내주기
 ⑲한국요리 강습 ⑳부부교실, 가족캠프 ㉑위안행사(체육대회, 생일잔치등)
 ㉒문화유적 탐방 ㉓지역생활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등) 및 각종 정보제공
 ㉔기타 _____

4. 현재 **가장 잘 실시되는 2가지 사업**(위의 번호 참조)과 참여인원, 시행빈도(월, 주별 등 횟수)에 대하여 답해주십시오.

1순위 (번호) _____ / 1회 평균 _____ 명, 실행빈도 (월, 주) _____ 회

2순위 (번호) _____ / 1회 평균 _____ 명, 실행빈도 (월, 주) _____ 회

5. 귀 기관에서 실시하기 **가장 어려운** 사업은? _____ 사업
 어려운 이유는?

6. (귀 기관에서의 실시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의 사회서비스 중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서 적어 주십시오.(위 사업명칭 이외의 경우는 직접 적어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7.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셨습니까?

- ①지역의 동장,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
- ②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기관을 통해
- ③지역사회의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을 통해
- ④TV,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
- ⑤인쇄 홍보물, 인터넷 등을 통해
- ⑥기타 _____

8.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결혼이민자 모집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 ①어려움이 별로 없었음
- ②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들의 비협조
- ③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으로 인해 수요자 확보가 어려움
- ④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직원들이 직접 방문, 설명해야 했음
- ⑤사업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⑥지역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파악이 어려움
- ⑦기타 _____

9. 현행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이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도움이 된다 ②도움이 된다 ③ 그저 그렇다
- ④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III. 타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현황

1. 지역내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유관기관끼리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2.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와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 조사 실시 ②공동(연합)사업 기획 ③정보공유
- ④지원사업 관련 문제 발생 시 공동 대응 ⑤결혼이민자 가족서비스의 역할 분담
- ⑥기타 _____

3.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네트워크는 얼마나 자주 정기모임이 있습니까?

(주, 월)_____ 회

4. 연계/협력현황

연계/협력 기관	협력·연계 정도				연계/협력 방식 (아래 참조)	주요 연계 내용
	없 음	낮 음	보 통	높 음		
①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②건강가정지원센터						
③이주여성인권센터						
④행정기관(시/군,읍/면/동)						
⑤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						
⑥교육청						
⑦학교						
⑧병원/보건(지)소						
⑨종교/민간단체						
⑩여성단체						
⑪상담소(법률, 성폭력)						
⑫농업기술센터						
⑬도서관(평생학습관)						
⑭문화원						
⑮기타()						

※ 연계/협력방식 예시: ①서비스 지원 ②서비스 제공 ③행사 및 사업 공동주최,
④클라이언트 의뢰 ⑤정보교환 ⑥기자재 교환 ⑦기타

5. 귀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 활동에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①어려움이 없다 ②연계활동 외 업무량 과다 ③개인적 역량부족
④보직의 변경/이직으로 연계의 단절 ⑤연계에 관심 없음
⑥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⑦기타 (자세히: _____)

6. 귀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①어려움이 없다 ②예산 및 인적 자원 부족
 ③상급자의 의지 및 지원 부족 ④필요성, 도움 정도 낮음
 ⑤지역 기관간의 신뢰관계 부족 ⑥지역내 모임의 주도 기관/인물 부족
 ⑦지역내 참여할 만한 공동사업 부족 ⑧연계활동 시 의견조정의 어려움
 ⑨기타 (자세히: _____)

7. 귀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3가지만** 우선순위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1) 1순위_____ (2) 2순위_____ (3) 3순위_____

- ①서비스(이용자) 대상자 의뢰·관리 ②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정보교환
 ③사업 공동 계획 및 실시 ④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 자원 관리
 ⑤지역사회 통합 정보 프로그램 개발 ⑥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⑦직원 교육 및 연수 ⑧기타 (자세히: _____)

8. 귀하께서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활동에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3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1) 1순위_____ (2) 2순위_____ (3) 3순위_____
- ①담당 실무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의 연계활동에 실질적인 통제력과 권한의 부여
- ②각 조직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의 공유와 활발한 정보교환
- ③연계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의 정기적 협의모임
- ④정보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업무의 표준화
- ⑤문제 및 욕구에 대한 공동조사 및 사업평가 활동의 실시
- ⑥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안내 활동의 공동 실시
- ⑦타 조직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조직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
- ⑧기타 (자세히: _____)

9. 귀하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결혼이민자가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IV. 결혼이민자가족사업 지원방안

1. 귀기관의 결혼이민자 가족사업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①담당 인력					
②재정					
③전문 강사 확보					
④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조					
⑤대상자 확보					
⑥자원봉사자 확보					
⑦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					
⑧시/군의 협조 및 지원					
⑨시설 및 기자재(공간, 차량 등)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표기하여 주십시오.

자체 역량강화 사항	중요도 순위 (번호표기)
①재정 확보	
②직원 교육 및 연수의 정례화	
③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④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⑤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 자원 관리	
⑥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⑦시설 및 기자재 확보 (활용 공간, 차량 등)	
⑧지역주민 대상의 사업인지 교육 및 홍보	

3. 결혼이민자가족 사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표기하여 주십시오.

정책적 지원 사항	중요도 순위 (번호표기)
① 재정 지원	
② 전문 인력의 지원 혹은 파견	
③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④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 활동 공동 실시	
⑤ 서비스 담당자 교육 및 연수 체계 정립	

4. 귀하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수행 시 **문제점이나 개선점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개선책 및 건의사항:

5. 귀하께서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정부 정책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V.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1.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세)

3.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이하 ② 전문대학 ③ 대학교
④ 석사 ⑤ 박사

4. 전공 학문 _____

5. 직장에서의 직위(예 :센터장, 팀장) _____

6. 사회복지분야 종사 기간 년 개월

7. 결혼이민자 가족사업 담당 기간 년 개월

8. 결혼이민자 가족사업과 관련된 교육 이수경험 여부

① 있다 ② 없다

9. (교육 이수 경험자만) 교육 회수 총 연_____회

10. (교육 이수 경험자만)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명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우수사례

사례 1: 금산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2006년 1월 25일 설립
- 교육, 상담 등 이주여성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운영
- 2006년 기준 금산에는 7개국 134명의 외국인 이주여성 거주 중

2. 주요 사업 내용

- 1) 국제결혼 이민여성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가족생활상담, 자녀들에 대한 보육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 2) 교육부문과 상담, 자녀보호, 정서문화, 다문화 수용 등 8개 부문에 걸쳐 체계적인 학습이 이뤄지며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례 2: 천안 모이세

- 천안지부 <http://cafe.daum.net/camoyse>
- 모이세 대표 홈페이지 <http://moyse.tjcaritas.or.kr>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2003. 1. 23 이주노동자 사목국 신설
- 2003. 3. 11 천주교 대전교구 외국인사목센터(대전 모이세) 개소

- 2003. 7. 27 무료진료 시작
- 2003. 8. 24 봉사프로그램 시작(성모의 마을 봉사)
- 2003. 8. 20 소식지 제1호 발간
- 2004. 1. 28 천안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쉼터) 개소
- 2004. 4. 27 천안 모이세 개소

- 외국인과 내국인의 관계형성을 위함이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제결혼여성들이 겪는 문화적, 환경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신체적, 정신적 의료지원과 심리적, 영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통한 자기개발과 한국사회의 이해를 증진시켜 주며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1) 연대활동

- (1) 이주노동자 인권연대(산업연수생제도 조사 및 제언, 고용허가제 1주년 경과보고 및 조사 제언, 외국인보호소 및 단속 실태 및 조사, 한*일 공동 심포지엄, 실무활동가 교육, 상담양식 통일 후 통계 작업, 이주민의 날 홍보 등)
- (2) 천안 복지예산 참여네트워크 (천안시 분야별 예,결산 검토, 정책제언, 모니터링. 특히 이주민 분야)
- (3) TF팀(지방선거 관련 정책제안활동)
- (4) 사회복지협의회 소속활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의견반영토록 이주민 분야내용 제언, 자원봉사박람회에 이주민분야 소개)

2) 교육활동

- (1) 다문화교육(한국에 다양한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주민들이 직접 학교, 기관에 문화소개활동)
- (2) 영상교육(이주민들의 영상교육, 쌍방간(국가간, 한국 내 이들의 소식전하기 등..) 의사소통 확산)
- (3) 영어미사 안내 : 매주일 2시 오룡동성당 / 천안역에서 도보 10분 구 시청근처

사례 3: 익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 설립 목적 및 주요연혁

- 2004년 원광대학교 법인에서 설립
- 설립목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의 차별 대우와 가정폭력,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을 해결하여 한국생활에 적응을 돕는 역할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사업내용

1) 운영사업

- (1)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 교육 : 기초, 초급, 중급, 고급반, 수준별 교육, 가정생활 적응교육
- (2) 우리사회 이해교육 : 요리교실, 박물관 견학, 지역문화유적지탐방 등
- (3) 가족 상담 : 면접, 전화, 가정방문 상담, 통역원 대기, 유관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연중 실시
- (4) 가족통합교육 : 배우자교육, 시부모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
- (5) 자조집단 : 출신국별, 지역별, 부부자조집단 운영
- (6) 다문화인식개선 : 다문화캠페인, 다문화축제, 다문화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
- (7) 정서지원 : 결혼이민자교육시 자녀보호 및 자녀지원 프로그램 등
- (8)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 정보화교육, 제과 제빵 교육, 통·번역사 양성, 지역전통 요리교육
- (9) 기타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특화사업, 지역네트워크형성, 임신출산교육

2) 거점사업

전국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5개 거점센터 중 하나인 제5 거점센터로 전라북도(7), 광주광역시(2), 전라남도(10)의 19개 지역센터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센터의 업무에 조력하고 있음.

(1) 필수사업

- 강사 및 방문교육사업(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원)도우미 교육
- 관리 지역 내 관련사업 네트워킹 형성
- 신규센터 사업지원 등 지역 내 사업관리 담당
- 지역특성화사업 개발 및 보급계획

(2) 업무협의회 개최

(3) 지역센터 사업, 운영 전반 자문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역센터 지원방문
- 프로그램 자료집 발간 및 배포
- 센터사업, 운영자문 및 지원
- 제5거점 네트워크 형성

(4)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사업

-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방문교육사업 관련 자문

(5) 중앙센터협력사업

- 상담슈퍼비전 실시
- 평가관련 간담회
- 센터지원 방문 시 동반사업

(6) 기타사업

- 영·호남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교류사업

3. 영농사업

- 1)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촌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영농교육을 실시(이론 및 현장 견학학습), 부부/ 가족단위교육 실시.
- 2) 주요교육: : 다문화가족과 농업정책, 농산물가공, 농업인과 건강, 영농정보화교육, 농사 문화, 식량작물 재배, 농기계안전교육
- 3) 특화사업: 압화 교육, 지역특화(고구마) 떡 만들기, 무 장아찌 만들기

4.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사례 4: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2004년 설립

- 설립목적: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언어, 문화, 풍습, 요리 등 교육, 가족상담,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으로 적응을 돕고자 함. 또한 국제화 시대에 이들의 원어민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열악한 외국어 교육환경을 개선·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자녀들의 국제화 대비 및 결혼이민자여성 자녀들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증진하고자함.

2. 주요사업 내용

1) 한국어학당

- 한국어교육(초, 중, 고급)
- 한국문화교육(가정예절, 풍습, 전통문화)
- 한국요리교육(삼계탕, 송편빚기, 김치담그기, 기타)
- 한국문화체험, 문화재관람, 역사탐방(박물관, 향토전시관)
- 효도체험- 부모님 모시고 함께

2) 상담소설치

- 가족생활상담, 가정폭력상담, 건강관리상담

3) 직업교육센터

- 직업교육(미용/ 제과 제빵/ 기타)
- 원어민 언어 강사

4) 국제어학(문화)센터 / 국제어린이집

- 국제언어교육(영어, 일본어, 중국어, 동남어 교육)
- 다국적문화체험

5) 자활공동체 ‘지구촌 두레’

영농기술사업 보급과 다문화가족들이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이들이 제조 및 가공한 매실청·매실된장을 판매하여 소득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사례 5: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1998.08.01 : 제천외국인한글학교 개교
- 2005.09.01 : 한국어세계화재단 관련단체 등록
- 2007.03.01 : 제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선정 운영
- 결혼이민자의 언어와 문화이해,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문화 활동을 통해 한국여성으로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사업 내용

- 결혼이민자와 산업체근로자 한국어교육,
- 한국 전통문화 및 우리사회이해교육(종이접기, 풍물, 컴퓨터, 이.미용, 임신·육아, 영·유아 안전교육, 민화, 북스타트 등)
- 2세 자녀 베이비시터팀 운영
- 2세 자녀 놀이방 운영
- 지구별도서관운영

사례 6: 괴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2001년 2월21일 국제가정문화센터 설립 및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활동 전개
- 2004년 1월15일 부설기관: 원어민 회화교실(영어,일본어) 설립 및 활동 전개
- 2007년 5월21일 부설기관: 국제결혼가정 문화센터 명칭 변경
- 2007년 12월03일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괴산분원 설립
- 2008년3월 괴산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비영리 사업자 등록

- 괴산군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지역사회 조직 활동

- 1) 괴산군 거주 다문화 가족 실태 전수 조사에 괴산군 사회복지과(현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
- 2) 여성주관의 날 기념식과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에 괴산군 여성단체 협의회와 연계하여 진행.
- 3) 대한 어머니회 충북지부가 주관한 제2회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및 장기 자랑 대회에 대한 어머니회 괴산지부 회원 20명,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국경 없는 합창 단원(15명)이 대회를 위한 회의, 합창 연습 및 행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작년 대상 수상, 올해 금상 수상.
- 4) 2007년 9월부터 괴산향교 내 유림회관 2층(건평70평)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괴산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사무실과 교육실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괴산향교 임원진이 이주여성과 자녀들에게 정기적인 한국 전통 예절교육 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1) 한글교육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배양 및 한국 문화 적응 훈련을 통한 정착지원
- 2) e배움 디지털 한국어 강좌 : 센터까지 나오기 힘든 입국초기 이주여성에게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기초초급 한글교육을 실시.
- 3) 요리교실 :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부족한 한국 요리 교실을 통하여 가정에 필요한 생활요리를 배우게 하여 가정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 4) 다문화 가족 자조 모임 및 인성예절교육 :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부족한 한국 전통문화, 풍습 등을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시부모들에게 다문화 교육과 가족구성원의 각각의 역할을 나라별 자조 모임을 가지면서 교육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영구히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토록 교육

사례 7: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07. 2.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07.12.31 충주시와 결혼이민자 사무위탁 협약
- 결혼이민자의 언어와 문화이해,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문화 활동을 통해 한국인으로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 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둠

2. 주요사업 내용

- 결혼 이민자 대상 교육 (한국어, 한국문화이해, 가족 통합교육)
- 결혼이민자 정서지원 사업(다문화 축제, 한국문화탐방, 요리)
-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조집단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상담
-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정보화교육)
- 다문화인식개선사업(다문화 강사, 언론매체 인터뷰등 홍보활동)
- 전문인력양성사업(한국어강사양성)

3. 지역사회 조직 활동

결혼이민자와 가족, 자녀들이 안정된 가정으로 정착하기 위해 관내 여러 단체들과 인프라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 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개척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1) 무료건강검진을 충주의료원과 협약을 맺어 1년에 2회 실시하며, 의료원 이용시 진료비의 50% 감면과 장례식장 이용시30% 감면(2009년까지 예정)
- 2)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충주시 문화원과 연계하여 2008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12월까지 예정)
- 3) 결혼이민자 상담을 충주경찰서 및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2008년 5월부터 진행 중

사례 8: 보은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2006년 7월 21일 아사달온누리문화센터 발족
- 2008년 3월 보은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식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과 사회 통합 분위기 확산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사회 형성
- 다름이 어울려 웃음꽃 피는 다문화 지역 공동체 사회 형성에 앞장서 이바지 함:
 - ①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 지원
 - ② 분야별 전문 인력 형성
 - ③ 다문화가정의 공동체 일자리 창출
 - ④ 다문화 자녀의 연령에 따른 교육 시스템 마련
 - 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 교육
 - ⑥ 다문화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주요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 우리사회이해교육
- 가족교육
- 상담
- 정서지원사업
- 자조집단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지역사회 조직 활동

- 1) 보은의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실직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 주며, 전문 인력과 체계를 갖추고 다문화에 동반적인 역할을 제공. (문화, 교육, 자녀, 복지, 여성, 건강, 농업 관계 기관과의 연계체계 형성)
- 2) 결혼이민자를 신문기자로 양성하기 위해 보은신문사와 공동으로 신문기자단 양성교육을 2008년 4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 3)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장담그기 프로그램을 2008년도에 한 해 5회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4) 보은교육청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취학아동 교육프로그램 '희망의 날개'를 2008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5) (주)한화 보은공장과 연계하여 '희망의 등지꾸미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사례 9: 부산 어울림 www.eulim.org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개소일 2005.03.09 : '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3층 교육관에서 개소
- 활동 목표 및 방향
 - 1)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정착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 2)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 3) 한국사회가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

2. 주요 사업 내용

- 1)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프로그램(어울림 학교)
 - 외국인 주부들 한국문화 및 한국어 습득
 -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 박물관견학/한국전통문화체험/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 정체성 확립과 위상강화 프로그램 : 상담원교육/외국인 주부 한글교사로 육성/각국문화의 날 행사
- 2) 한국인 배우자를 위한 배우자 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

- 한국인과 함께 하는 바자회 및 음식문화 문화축제
 - 가족캠프 및 나들이 년 2회 (5월, 10월)
 - 소그룹을 조직하여 수시로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 3) 다문화가족자녀들을 위한 일요학교 :
- 베트남어 교실/ 중국어 교실/ 인도네시아 교실/ 다함께 교육
- 4) 한국사회 의식개선활동
- 한국인과 함께 하는 바자회 및 음식문화 문화축제
 - 외국인 배우자들의 시민권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
 - 어울림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한국사회에 끊임없는 교류
- 5)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 출산지원 · 상담 · 성교육
- 6) 자원활동 영역 :
- 어울림학교 어린이 교실 / 홈페이지 관리 / 차량지원 / 행사도우미-가족 모임, 소풍, 가족 캠프

사례 10: 울산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2006년 3월 28일 :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개소식.
-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 생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적응을 도와 안정적인 정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및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원함

2. 주요 사업 내용

- 한국어 교육 : 초급, 중급
- 문화 교육 : 육아정보교류광장
- 가족 지원교육 : 자원봉사단 교육

- 정보화 교육 : 컴퓨터 교육
- 생활요리 교육 : 생활요리
- 정보 및 홍보사업 : 결혼이민자가족 생활책자 /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실태조사
- 직업교육 : 전문상담원 양성
- 상담사업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자녀보호사업
- 자조집단 사업
- 문화정서지원사업 : 멘토결성, 도자기 체험, 가을나들이, 전통조각보 만들기
- 문화인식개선사업 : 다문화축제, 캠페인, 지역축제
- 외부지원사업 : 찾아가는 국악원(국립국악원), 찾아가는 한글교실(SK에너지), 지역 외국인 및 이주여성지원을 위한 한국어강사 양성사업(울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지원 센터),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사업(울산광역시청), 결혼이민자상담원 양성 과정(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록 3】

다문화가족지원법 - 법률 제8937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록 4】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8.7.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존중하며 상호 교류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증진토록 하며, 우리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통합과 창조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사회”란 국적·민족·인종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2. “문화적 다양성”이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표현 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3. “다문화정책”이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4. “이주민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재한외국인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 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문화·예술의 활성화,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

력을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다음의 기본 정책

가.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나.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보급

다.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정보자료 제작 및 보급

라.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마.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의 지원

바.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3. 다문화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8조(추진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한국다문화진흥원) ① 다문화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다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연구
 2. 다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다문화의 국내외 교류
 4. 다문화에 관한 교육 자료 개발
 5.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지원
 6.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 연구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문화진흥을 위한 한국다문화진흥원의 업무집행과 관련 부서의 설치 인력 지원 등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여야 하며, 다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외국인 정책 관

런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문화적 다양성의 기반 조성

제11조(문화적 다양성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 등에 관계없이 이주민 등이 문화적 고유성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 콘텐츠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과 다문화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자료 및 활동, 외국문학·예술·문화콘텐츠 등의 번역 및 소개 등의 다문화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콘텐츠를 조사·연구 또는 개발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일반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다문화 환경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공간 등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문화사회의 문화공간 조성 및 확충
2. 다문화 관련 예술·축제 등의 지원
3.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다문화 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 박물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한 자료

를 관리·보존·전시하는 박물관·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의 설립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도서관과 미술관 설립의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다문화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활용 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를 정보화하고 활용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 통신망을 활용하는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회구성원이 다문화 관련 정보를 편리 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어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주민 등과 그 자녀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제19조의 한국어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 국어교육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원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 등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해야 한다.

제17조(문화격차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국적·민족·인종 등으로 인하여 문화 창조와 향유에 있어서 기회의 차별을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 등

제1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제 다문화 교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또는 외국 문화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이들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 양성·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다문화정책 관련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2008년)

시도	지역	기관단체명	운영주체	설립년도
서울 (4)	성북구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2007
	영등포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6
	동작구	중앙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부산 (3)	부산	부산시상구	직영	2006
	부산	부산시남구	직영	2006
	사하구	사하구	직영	2008
대구 (3)	남구	불교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006
	달서구	계명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서구	가정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008
인천 (3)	인천	인천시남구	직영	2006
	계양구	빈곤퇴치운동본부	사단법인	2008
	강화군	인천교구 강화천주교회	사회복지법인	2007
광주 (2)	광주	광주광역시	직영	2006
	북구	이주가족복지회	사단법인	2008
대전 (2)	대전	대전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6
	대덕구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008
울산 (1)	울산	울산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6
경기 (9)	수원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엠마하우스)	재단법인	2007
	부천	부천문화재단	재단법인	2006
	안성	성결원	사회복지법인	2007

	의정부시	경민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안산시	안산 YMCA	사단법인	2008
	성남시	신구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2008
	용인시	우원기념사업회	사단법인	2008
강원 (6)	춘천시	홀트아동복지회 강남아동상담소	사회복지법인	2006
	강릉시	강릉문화원	특수법인	2006
	원주시	명륜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2008
	속초시	속초 YMCA	사단법인	2008
	홍천군	홍천문화원	특수법인	2008
	횡성군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008
충북 (5)	청주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2007
	옥천군	옥천한국어학당	비영리민간단체	2007
	충주시	충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2008
	제천시	제천외국인한글학교	비영리민간단체	2008
	보은군	아사달	비영리민간단체	2008
충남 (5)	아산시	아산시	직영	2007
	공주시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2007
	금산군	금산문화원	특수법인	2007
	부여군	부여군	직영	2008
	예산군	행복나무	사단법인	2008
전북 (7)	익산시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6
	장수군	호남사회연구회 논실마을사람들	사단법인	2006
	김제시	김제이주여성쉼터	사단법인	2007
	정읍시	정읍시	직영	2008
	남원시	한울안운동전복지부	사단법인	2008
	완주군	우석대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2008

	순천시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비영리민간단체	2007
	나주시	나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	사단법인	2007
	영암군	영암이주여성센터	비영리민간단체	2006
	여수시	여수시	직영	2008
	광양시	광양시	직영	2008
	고흥군	고흥군	직영	2008
	장흥군	장흥군	직영	2008
	해남군	두성재단	직영	2008
	장성군	전남대학교 국어교육원	사회복지법인	2008
경북 (10)	구미시	아름다운가정만들기	비영리민간단체	2006
	예천군	예천군	직영	2006
	포항시	포항시	직영	2007
	문경시	문경시	직영	2007
	경주시	경주시	직영	2008
	안동시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재단법인	2008
	상주시	상주교회	비영리민간단체	2008
	경산시	경산시	직영	2008
	김천시	조계종직지사지부	사회복지법인	2008
	영주시	영주가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2008
경남 (9)	경상남도	창원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진주시	진주시	사단법인	2006
	김해시	인제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2006
	마산시	마산 YMCA	사단법인	2008
	밀양시	성우애육원	사회복지법인	2008
	거제시	거제 YMCA	사단법인	2008
	함양군	함양문화원	특수법인	2008
	양산시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비영리민간단체	2008

기획 2번 30부만 **집필자** 따로 해주세요

2009년 2월 28일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국립공주대학교 모선희 교수

공동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책임연구원

국립공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선행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김성운 연구원

자문위원 · 목원대학교 장온정 교수

기획연구 2008-02 ·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글쓴이 · 모선희, 이인희, 이선행, 김성운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8년 12월 31일 / 발행 · 2008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20(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064-2 03350

<http://www.cdi.re.kr>

© 2008,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국립공주대학교 모선희 교수

공동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책임연구원

국립공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선행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김성운 연구원

자문위원 · 목원대학교 장온정 교수

기획연구 2008-02 ·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글쓴이 · 모선희, 이인희, 이선행, 김성운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9년 2월 28일 / 발행 · 2009년 2월 28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20(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064-2 03350

<http://www.cdi.re.kr>

© 2008,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